



주간통일정세 2009-07(2009.02.09~02.1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07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원산시 공장 시찰(2/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원산에 있는 원산농업대학을 현지 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김 위원장은 대학 시설을 돌아보고 “(북한에서) 처음 창립된 인민의 첫 농업기술대학”으로 지난해 개교 60돌을 맞은 원산농대가 그동안 수많은 유능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양성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들을 널리 개척해 전반적 농업과학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언급
- 시찰에는 리철봉 조선노동당 강원도위원회 책임비서, 박남기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박명철 국방위원회 참사가 수행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원산시의 유리병공장, 구두공장, 화학공장 등을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또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과 함경남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 농기계들을 보내 2월 11일 전달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

● 美국가정보국장, 김정일 건강 상당 회복(2/12,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8년 8월 뇌졸중을 앓았지만 지금은 상당 정도 건강을 회복, 중요한 사항은 김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데니스 블레이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12일 밝힘.
-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블레이어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의 국가위협평가 청문회에 출석, 서면 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은 작년 8월 뇌졸중을 앓아 수 주 동안 통치 불능상태였지만 최근의 공개 활동은 그의 건강이 상당정도 개선됐음을 시사한다”고 언급
- 블레이어 국장은 또 “우리는 김 위원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국가통제기구들은 여전히 강력하고, 북한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분석하고 이어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 “열악한 경제상황이 북한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체제는 공개발표를 통해 적절한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

● 김정일, 새 軍지도부와 포훈련 참관(2/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영춘 신임 인민무력부장과 리영호 총참모장



을 대동하고 포병사령부 산하 제681군부대의 포사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리정부 포병사령관으로부터 부대 현황을 보고받은 뒤 전망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지켜봄. 김 위원장은 “인민군은 수령결사옹위 정신, 총폭탄 정신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사상의 강군으로 자라났을 뿐 아니라 우리를 침략하는 적들을 단매에 요절낼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강위력한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됐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
- 군부대 시찰에는 김정각 총정치국 1부총국장, 현철해 김명국 리명수 대장 등 군 고위간부들과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이 동행

● 김정일, 농장에 농기계 전달(2/11,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시찰했던 “평안북도의 룡천군 신암협동농장과 태천군 은흥협동 농장에 농기계를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
- 방송은 김 위원장이 보낸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전달식이 10일 각 농장에서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의 농기계 지원은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 알곡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 것”을 바라는 뜻이라는 농장 관계자들의 반응을 보도

● 장성택이 정운 천거, 후계체제 주도(2/15,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월 8일 장남인 정남 대신 3남 정운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위원장의 3남 간택엔 정작 정남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건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 장성택 부장은 작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이후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북한 국정을 운영하면서 3남 후계 구축을 추진했고, 여기에 작년 초부터 3남 후계 물밑작업을 벌여온 김 위원장의 네 번째 부인 김옥이 가세해 김 위원장의 결심을 이끌어냈다는 것임.
- 복수의 정보소식통은 15일 “장 부장이 지난해 중반 김 위원장의 와병설 이후 남한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북한 조기붕괴’론 등이 확산되는 상황 등을 이유로 내세워 김정일 위원장에게 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할 것을 적극 건의해 승인받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
- 장 부장이 자신과 각별한 관계인 장남 대신 3남을 천거한 것은 3남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애정과 자신의 정치적 미래 등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분석됨. 후계자 지명 과정 뿐 아니라 최근 북한군 최고위층 인사에서 ‘장성택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권력기구 전면에 부상한 점 등으로 미뤄 장 부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구도 구축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소식통들은 “일각에서는 후계문제에서나 실권 행사 측면에서 장성택 부장과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동급으로 보기도 하는데 현재 두 사람의 지위와 영향력은 비교가 안된다”며 “현재 리제강을 포함한 모든 북한 간부들이 장 부장의 지휘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따르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

● 北, 3남 김정운을 ‘김 대장’으로 호칭(2/15, 연합)

-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1월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3남 후계 ‘교시’를 받고 각 도당에 하달하면서 3남 이름(김정운)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은 채 ‘김 대장’으로만 지칭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도 당 급 일부에서도 김 위원장의 아들 중 한명이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정보 소식통들이 15일 전언
- 북한에서 ‘김 대장’이라는 호칭은 당초 항일 빨치산 활동 때의 김일성 주석을 가리키는 말로, 북한이 ‘혁명시인’이라고 내세우는 조기천이 광복 직후 발표한 장편서사시 ‘백두산’과 이 시를 토대로 만든 영화 ‘백두산’ 등에서 김 주석을 ‘김 대장’이라고 지칭했었음. 김정운은 생모인 고영희씨 생전엔 ‘셋별장군’으로 불렸음.
- 한편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 ‘교시’를 내린 날인 1월8일은 정운의 생일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택일 배경이 되지 않았느냐는 분석도 제기됨. 정운의 생년월일에 대해선 1983년 1월8일과 1984년 9월 25일 설이 있었으나 정보 소식통들은 1984년 1월8일이라고 밝힘.

● 김정남, 14일 베이징 경유 귀국(2/15,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38)이 14일 베이징의 서우두(首都)공항을 통해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귀국했다고 대북 소식통들이 15일 보도

나. 정치 관련

● 김영남, 남한 반통일 세력과 투쟁하라(2/15,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회 생일(2.16) ‘경축 보고’에서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 채 “남조선의 반통일 호전세력에게 무서운 철추를 내리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을 선동
- 김 상임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2.16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보고자로 나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에 처하게 하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고 있는 남조선의 반통일 호전세력”이라고 남한 정부를 맹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은 최고위층이 남한 정부를 이렇게 대놓고 비난하며 ‘투쟁’을 선동하는 공개연설을



한 것은 흔치 않은 일임. 그러나 김영남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선 종래와 달리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만 언급

* 2008년 보고는 남북관계에서 남한 정부에 대한 비난 없이 “6·15 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높이 10·4선언을 이행하며”라고 두 선언의 이행의지만 강조했다.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보고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으로 “송고한 혁명적 도덕의리로 수령 영생 위업을 훌륭히 실현”하고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우리 식의 국가영도체계를 확립”한 점도 언급, 또한 김 위원장의 지난해 12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에 대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준 것으로 “당과 혁명 발전의 역사적인 전환기를 안아온 특기할 사변”이라고 주장

● 조선직업총동맹, 용산참사 비난(2/14, 조선직업총동맹 대변인 담화; 민주조선)

-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은 14일 용산참사에 대해 “인권말살 행위”라고 비난하며 남한 주민들의 “대중적 투쟁”을 선동
- 직총 대변인은 담화에서 이번 참사는 “인권 유린지, 반민주적 사회인 남조선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비극”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전체 노동계급은 “남조선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 층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고 주장
- 또 민주조선도 14일 ‘수사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제목의 논평에서 경찰의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하는 철거민들과 인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주장

● 北, 해안포 훈련횟수 증가(2/13, 연합)

- 북한이 해주와 웅진반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해안포의 훈련 횟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짐. 군의 한 관계자는 13일 “최근 북측 해안가에 엄폐된 해안포의 일부가 진지 밖으로 노출된 모습이 자주 식별되고 있다”면서 “이는 도발을 위한 준비차원이 아니라 평시 교육훈련 차원의 전투준비태세 유지 차원으로 보인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이 작년 상반기부터 NLL(북방한계선) 인근 도서에 해안포를 30%가량 늘렸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전년에 대비해 해안포 전력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소개
- 북한은 사곶, 해주, 웅진반도 등 서해안 주요 기지에 사거리 20km에 달하는 76mm, 100mm 해안포를 다수 배치해 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신의 길이를 늘려 사거리가 30~40km로 확장된 해안포도 갖다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해주 인근에만 100여문의 해안포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또 사거리가 83~95km에 달하는 샘



릿, 실크웜 지대함(地對艦) 미사일도 NLL 인근 해안에 배치해 놓고 있음.

● 北, 장성택 라인 권력 전면 부상(2/13, 연합)

- 200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 발생 후 그를 대신해 북한 국정을 운영해온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측근들이 빠르게 대거 북한 권력 전면에서 부상, 대표적 인물이 지난 11일 각각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에 임명된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영호 전 평양방어사령관, 그리고 박명철 국방위원회 참사임.
- 특히 10여 년간 체육부 장관격인 조선체육지도위원장을 지내다 수년전 철직 당했던 박명철 참사의 재등장은 북한 당국이 공식 발표한 게 아님.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매체들이 12일 밤과 13일 새벽에 걸쳐 보도한 김정일 위원장의 원산 방문 수행원 명단을 통해 포착함. 복수의 정보 소식통은 북한 매체 보도에서 ‘국방위 참사’로 첫 호칭된 박명철이 조선체육지도위원장을 지낸 박명철이라고 확인하고 “박명철은 지방의 어느 한 군에서 인민위원장(군수)으로 일하다가 최근 국방위 참사로 전격 기용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

● 北, 안보리 제재권 배격 주장(2/13,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13일 ‘국제분쟁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국제분쟁에서 ‘당사자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분쟁의 악화만을 초래하는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강권적인 북한 노동당 기관지조치들은 철저히 배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안보리 결의들이 “총회의 승인 하에서만” 효력 갖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분쟁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유엔의 책임적인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어떤 특정한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 실현을 합법화해주는 도구로 이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조평통 성명은 北당국 공식 대변(2/13, 노동신문)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북관계 문제에서 북한을 “공식대변하는 기관”이고 그 성명은 북한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한 법적 성격의 문건”이므로 최근 조평통의 ‘무효화’ 성명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노동신문이 13일 주장
- 노동신문은 ‘성명의 무게를 결코 약화시킬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조평통 성명에 대해 남한 정부가 ‘대북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라거나 ‘남북기본합의서는 성명 한장으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것을 거론, 이같이 강조
- 노동신문은 조평통 성명은 “우리 공화국(북한)의 권위있는 기관의 법적 선언”이므로 “누구도 그에 대해 흥정할 수 없다”며 “법적 성



협 제거'를 요구

- 신문은 “술한 자금과 노력,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핵개발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이 우리를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명하고 핵전쟁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가해오고 있는 조건에서 부득이하게 취한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
- 신문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신뢰할만한 대체 핵탄두 (RRW) 프로그램’ 발언을 거론, “지금 미국의 군부 호전세력들이 핵무기를 보다 현대화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미국이 핵만능론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

● 北, 아파치헬기훈련 도발행위 비난(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사태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주한미군 제2사단 제2전투항공여단의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사격 훈련에 대해 “도발행위”라며 “전쟁접경으로 치닫는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가는 범죄행위로서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스위스서 재생에너지 기술교육(2/1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대표단이 오는 3월 스위스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기술교육을 받게 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북한에 재생에너지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아가페 인터내셔널 (Agape International) 관계자는 이날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대표단이 3월에 스위스를 방문해 연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힘. 그는 “북한 대표단이 이번 연수 과정에서 풍력 발전기를 직접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소개
- 아가페 인터내셔널은 북한의 농업 개발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 ‘캠퍼스 퓨어 크리스투스’(Campus fur Chritus)와 함께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돕고 있으며 지난 2007년부터 북한의 황해북도 황주군에 300W와 2kW 규모의 풍력 발전기를 1대씩 설치하고 이에 관한 선진 기술을 전수
- 최근 영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도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조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기술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北, 농사철 앞두고 ‘물잡이 투쟁’ 전개(2/11, 평양방송)

- 북한에서 봄 농사철을 앞두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물잡이 (물 가두기)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11일 보도, 방송에 따르면 각 지역 물길관리소, 관개관리소와 농촌에서는 저수지와 보조 수원마다 “올해 농사에서 쓸 물을 잡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 중임.



- **2009년 첫 외국인 관광단 14일 방북(2/11,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에서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고려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 관광단이 올해 처음으로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등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
 -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단은 영국과 호주,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인 등 15명으로 구성되었음.
 - 고려여행사는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이 예년처럼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이 기간을 겨냥해 미국인을 대상으로 북한관광 홍보를 시작했다고 RFA는 보도

- **北 휴대전화끼리 통화 불가(2/9, 열린북한통신)**
 - 북한에서 2008년 12월 중순 이집트 오라스콤사의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지난 1일 현재 아직 평양에 국한돼 있으며, 도청이 어려운 휴대전화 간 통신은 안된다고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이 만드는 온라인 북한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이 9일 보도
 - 소식지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평양 시내에서 휴대전화와 일반 전화 사이의 통신은 가능하지만, 휴대전화끼리의 통신은 불가능하다"며 "휴대전화 통화가 불완전한 이유는 도청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언급
 - 소식지는 또 "지방의 유선 전화로 평양의 휴대전화에 거는 것은 가능하지만, 평양의 휴대전화로 지방의 유선전화에 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휴대전화관련 도청 시스템이 부분적으로만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
 - 통신 요금은 1분당 1달러 정도이며, 단말기 가격은 최근 360유로에서 180유로(한화 32만 원 정도)로 내렸지만 휴대전화 서비스가 불편하고 비싸 "무역 일꾼들과 개인 장사꾼들을 포함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오라스콤 휴대전화에 무관심하다"고 소식지는 보도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총인구, 2천405만 명 추산(2/1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총인구는 2008년 10월 기준 2천405만 1천21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이 발표
 - 지역별로는 평안남도가 405만 1천706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양시 325만 5천388명, 함경남도 306만 6천141명, 평안북도 272만 8천617명 순임. 반면 북부내륙의 산간지방인 자강도와 량강도에는 총인구의 8.39%에 불과한 201만 7천65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됨.
 - 북한인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1천172만 2천403명, 여성이



1천232만 8천815명으로 집계돼 여성이 60만 명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는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지 않은 군 시설을 제외하고 북한 전역의 588만 7천767 가구에 상주하는 모든 가구원이 조사된 것임.

- RFA는 UNFPA 측의 설명을 인용, “예비 결과는 수작업으로 조사 결과를 집계해 컴퓨터로 자료를 처리하는 최종 결과의 수치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며 “북한의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자세한 최종 결과는 올해 4분기에나 나올 것”이라고 보도

* 북한은 2008년 10월1일부터 보름간 UNFPA의 후원 아래 인구 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를 실시, 북한 전역에서 현장조사 요원 3만 5천200명과 지도요원 7천500명을 동원해 가가호호를 방문, 나이, 성별, 결혼 여부, 가족 수, 가족 구성원의 직업, 개인소득, 가구와 가전제품 목록, 교육수준, 국가 내 이동, 장애 유무, 출생률, 사망률, 화장실 유무, 난방 등 총 53개 문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

● 北축구, 박두의 손자도 축구 꿈나무(2/13, 연합뉴스)

-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때 이탈리아와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어 북한 대표팀의 8강 진출을 견인했던 ‘동양의 펠레’ 박두의 선수의 손자 박성일이 현재 4.25축구단 청소년 팀에서 북한 축구의 꿈나무로 성장
- 또 북한의 현재 월드컵 축구대표팀에서 과감한 슈팅과 송곳 같은 패스로 세계적인 기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홍영조는 4.25축구단장인 홍현철의 아들로 밝혀짐.
- 북한은 몇 년 전부터 선발 당시의 발재간 등 기술보다는 체격 조건 같은 잠재력 위주로 청소년 팀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北, 김정일 생일 행사 준비 한창(2/12,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회 생일(2.16)을 가리키는 “2월의 명절”을 앞두고 그의 ‘업적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와 경축모임, 답사행군 등을 통해 이상화 분위기를 점점 더하고 있음.
- 특히 조선중앙방송은 12일 “2월에 들어서자마자 백두산 밀영에 벼들 꽃이 피어났다”며 “신비한 자연현상”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은 “2월초부터 이 일대의 기온이 지난해보다 15℃ 정도나 올라가 눈석이(눈이 녹아 스러짐)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김 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이채로운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선전
- 김 위원장의 생일을 전후해 각종 체육경기 행사도 개최, “제18차 백두산상 국제휘저(피겨) 축전이 15~17일 평양시 빙상관에서 열려 북한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각국 피겨선수들이 참가한다”고 중앙통신은 보도
- 평양시의 식료연합기업소 산하 공장, 기업소들은 김 위원장 생일에



맞춰 “더 많은 식료품을 공급할 목표 밑에 생산에 매진”하고 있으며, “사회급양망(식당)들에서는 특색있는 여러가지 민족음식을 봉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리기석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 조선인 축하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평양방송에 따르면 뿔스까(폴란드)에서 경축집회가, 기네(기니)에선 경축집회와 사진전시회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강연회가 각각 개최

● 北 축구 승리로 흥분의 도가니(2/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북한 축구대표팀이 전날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를 꺾은 것과 관련, “축구 열로 들끓은 하루”였다고 경기 당일 평양의 흥분된 분위기를 상세히 보도
- 경기는 오후 3시 시작됐지만, 정오에 벌써 관람석은 초만원에 이르고 경기장 주변의 식당과 이동·야외 봉사매대도 경기를 보러온 인파로 붐빔.

● 北 청년, 29% 인지능력 떨어져 군대 못갈 수준(2/12, 연합뉴스)

-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내 정보기관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NIC는 최근 펴낸 ‘세계 보건 실태의 전략적 의미(Strategic Implications of Global Health)’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지난 1990년대 극심했던 북한 식량난 여파로 당시 태어난 북한 청년들의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져 미국 기준으로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징집대상자 10명 중 2-3명은 군대도 가지 못할 정도라고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밝힘.
- NIC는 또 과도한 의료비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건 분야 협력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뒷문외교’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對北) 의료 지원을 통한 관계개선을 권고

● 어김없는 北 김정일 생일, 신비 현상 보도(2/12, 조선중앙방송)

- 북한 매체들은 매년 김정일 위원장의 2월16일 생일 때마다 각종 신기한 자연현상이 나타났다고 선전, 우상화에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도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12일 “백두산 밀영에 벼들꽃이 피어났다”며 “참관자들은 자연도 절세의 위인의 탄생을 못잊어 꽃을 피웠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고 선전

● 함경도서 유행성출혈열로 수십명 사망(제265호, 오늘의 북한소식; 2/11, 좋은벗들)

- 북한 함경도 지역에서 최근 유행성 출혈열이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 11일 주장, ‘오늘의 북한소식’ 제265호에서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에 위치한 의대병원에서



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출혈열로 사망한 사람이 55명에 이른다”고 보도

- 이 병으로 함경북도 의대병원에 19명, 회령시 인민병원에 7명이 각각 입원해 있으며 함경남도 함흥시의 각 인민병원에도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시 보건부는 기존 병원과 따로 떨어진 낡은 건물을 임시로 꾸려 환자들을 격리수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식지는 보도
- 북한에서는 유행성 출혈열에 걸린 것으로 판명된 환자들을 20일간 격리시킨 뒤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 사람은 퇴원시키지만 치료약품 부족으로 인해 격리기간에 숨지는 환자들도 생긴다고 소식지는 설명

● 北, 김정일 건강기원詩 소개(2/11,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이 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16)을 앞두고 그의 건강을 기원하는 시를 내보냄.
- 조선중앙방송이 11일 소개한 시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시인 류동호가 쓴 ‘우리 장군님 건강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시로써 8개 구절로 된 시는 구절마다 “우리 장군님 건강하시면”으로 시작, 그가 건강하면 “세상만사 즐겁게 좋게만 보입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

● 北정월대보름, 풍년·건강 기원(2/9, 조선중앙TV)

- 북한은 설, 추석과 함께 정월 대보름을 공휴일로 지정
- 평양 선교민족식당 책임자 송춘옥 씨는 중앙TV와 인터뷰에서 오곡밥과 아홉 가지 마른나물 음식들을 비롯해 평양의 4대 음식인 평양냉면, 평양온반, 평양송어국, 녹두지짐 등 여러 음식과 당과류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했다고 언급

● 北어학지, 남편 소개 때는 ‘저의 세대주’(2008년 4호, 문화어학습)

- ‘문화어학습’ 최근호(2008.4호)는 부부 사이에 예절이 없어지면 사랑도 없어진다고 ‘부름말(호칭)’ 예절을 잘 지킬 것을 ‘교양’
- 잡지는 부부간 호칭을 신혼기, 자식 양육기, 노년기라는 세 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에서 바람직한 호칭을 제시M, 신혼기엔 남편에게는 ‘승희동무’, 아내에겐 ‘영옥이’와 같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다는 것임.

● 北, 식물군락도 편찬(2/10, 조선신보)

-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가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북한 각 지역의 식물 군락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인 ‘조선식물피복도’를 편찬했다고 조선신보가 10일 보도, 이 식물지도를 보면 해당 지역의 식물자원 분포 상태와 생태적 특성, 이용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신문은 소개

- **北 피겨 최우수선수에 리성철·리은하 선정(2/10, 조선신보)**
 - 북한 조선체육지도위원회에서 2008년 최우수 피겨 선수로 남자부의 리성철과 여자부의 리은하를 각각 선정했다고 조선신보가 10일 소개
 - 평양철도국체육단에 소속한 리성철은 2008년 북한에서 열린 국내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컵 피겨대회에서도 금메달을 수상, 리성철과 같은 팀에 속한 리은하는 작년 북한에서 열린 4차례 국내대회 모두를 석권

- **최태복, 내 손녀도 원어민에게 배운다(2/10, 자유아시아방송)**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영국 의회 대표단에 북한 영어 교사 양성을 위한 영국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내 손녀도 원어민 강사들에게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방북단 일원인 캐럴라인 콕스 상원의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최태복 의장은 자신의 손녀도 북한 대학에서 영국문화원 소속 원어민 강사들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근 초등학교부터 영어교육을 하도록 정책을 바꾼 만큼 이들 학생을 가르칠 영어 교사들을 준비시키는 데 원어민 강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
 - 영국 의회 방북단을 만난 북한의 궁석웅 외무성 부상은 북한의 고질적인 에너지 부족을 고려해 앞으로 영국의 대북 지원 활동을 단기간의 ‘긴급구호’에서 장기간의 ‘개발지원(longer term development assistance)’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RFA는 소개
 - 콕스 의원은 북한의 지원 요청에 “유엔의 비탄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하루속히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역제의했으나 북한측은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언급
 - 영국의 의회 방북단은 그러나 북한과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귀국한 직후 영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영국 대학생들이 북한의 대학과 초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금을 조성하고 양국간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北단체, 샤프 발언 비난(2/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5일 대변인 담화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불안정 사태 대비책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미국 호전광들의 용납못할 대결 선언, 전쟁 폭언"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또 이 단체는 오는 8월 한미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에 새로운 공동 작전계획이 처음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침략전쟁 도발의 전주곡"이라고 주장

● 조선신보, 北, 클린턴 아시아 방문 주시(2/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4일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행각과 조선반도 정세' 제목의 글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오바마 정권의 첫 아시아 외교'라며 "조선(북한)은 대화와 대결을 가리는 척도를 가지고 첫 아시아 외교의 성패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클린턴 국무장관의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언론들은 북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떠들었다"며 "미군과 남조선군이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무력증강이 다그쳐지고 호전세력은 '북의 급변사태'와 '선제공격'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
- 특히 "반목과 대립은 위험수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사태방치는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경고하는 교전 상대방(북)의 의도를 해석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정책조율 과정에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번 클린턴 국무장관의 한국, 일본, 중국 순방과정에서 대북 메시지에 주목할 것이라고 주장
- 조선신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과거의 북남합의들을 백지화함으로써 민족공조의 전제를 깨트리고 말았다"며 "조선반도의 대결구도를 조선 대 미국, 남조선으로 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과 강경대응'의 악순환을 촉발시켰다"고 비난

● 클린턴, 北核 완전포기시 정상화 용의(2/13,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돼 있으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하지만, 최근 계속된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과 관련해서는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클린턴 장관은 경고했으며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정보가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



- 클린턴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인 다음 주 한·중·일 3국과 인도네시아 등 4개국 방문을 앞두고 이날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연설과 뒤이은 콘퍼런스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 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와 다른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언급
- 그는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첨예한 위협을 북한 핵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고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해 한국 등 회담 참가국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지지하며 나는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킬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
- 그는 “북한 정부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종전의 핵무기비확산조약 체결 상태로 복귀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이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 하지만,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대남 위협발언에 대해 “어떤 도발 행동과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공세를 하지 않아야 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해 북한의 대남 공세가 북한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전달
- 클린턴 장관은 뉴욕필하모닉의 평양 공연과 같은 미국과 북한 간의 교류에 관한 질문에도 “상당 부분이 북한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이나 말 등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런 행동은 북한과 함께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
-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잊고 않고 있으며 다음 주 도쿄(東京)에서 이들 가족 일부와 만날 계획”이라고 답변

● 美 또 ‘北 핵무기 보유’ 명기(2/12, 연합뉴스)

-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무기 실제 인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기구의 보고서가 또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
-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내 정보기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위(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최근 발간한 ‘전세계 보건실태의 전략적 의미’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기술
- 보고서는 12개국의 보건실태 연구 결과에서 12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 인도, 북한 그리고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핵보유국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China,



India, North Korea, and Russia possess nuclear weapons, while Iran is an aspiring nuclear power)”고 기술

- 보고서는 특히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비공식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 받고 있는 인도는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핵무기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과 나란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명기한 반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과는 차별화 해서 언급
- NIC는 2008년 11월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국가(a nuclear weapon state)’로 언급한 바 있고,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OM)도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핵무기보유국으로 기술, 파문을 일으킨 바 있음.

● 미국방부, 北미사일 발사, 6자회담 방해(2/11, 연합)

- 미국 국방부는 11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준비설과 관련,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핵 6자회담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
- 브라이언 휘트먼 국방부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준비 움직임과 관련,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행동들이 일어난다면 현재 6자회담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교적 노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
- 앞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준비를 계속한다면 미국은 이를 요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방부, 구매 관련 對北제재 해제(2/11, 연합)

- 미국 국방부가 지난 1월21일 물품구매 관련 대북제재를 해제,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정부가 작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함에 따라 이뤄진 것임.
- 미국 의회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1월2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테러지원국가나 단체가 소유·통제하는 회사와는 구매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방부의 연방구매세칙(DFARS)에서 북한을 삭제했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소유하거나 북한과 관련을 맺고 있는 회사들로부터도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음.

● 클린턴 국무장관, 北 위협행동 용납 불가(2/10,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최근 북한의 위협행동에 대해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 클린턴 장관은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이 향후 수주 흑



은 수개월내에 6자회담이나 다른 형태의 양자 및 다자협상에 응하기를 기대

- 취임 후 처음으로 내주 한국·일본·중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는 클린턴 장관은 국무부에서 카렐 슈바르첸베르크 체코 외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행동이 동북아 지역 안정과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의 전조가 아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냄.

● 클린턴 日납치가족 면담 검토(2/9, 미국무부)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일 기간에 클린턴 장관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을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미 국무부는 9일 일본의 제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 추진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면서도 “우리는 그 제안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언급

● 北, 핵보유국으로서 북미대화 원해(2/9, 연합)

- 북한은 지난 3~7일 평양을 방문했던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전문가들에게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북·미 양자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9일 확인됨.
- 이 참석자에 따르면 미국 방북단은 북한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수차례 만났으며 김 부상은 방북단에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도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이를 인정해달라는 뜻은 아니라고 언급

나. 북·중 관계

●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경축연회(2/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12일 경축연회가 열렸다고 중앙통신이 14일 보도, 이날 연회에는 왕강(王剛)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류홍차이(劉洪才) 대외연락부 부부장, 우동허(武東和) 중·북 우호협회장, 후정위(胡正躍) 외교부 부장조리 등이 참석

다. 북·러 관계

● 러 대통령, 北김정일에 생일 축전(2/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회 생일(2.16)을 맞아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11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축전에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 관계의 강화 발전을 위한 김 위원장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의 “친근하고도 다방면적인 연계가 앞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발전함으로써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소개

라. 북·일 관계

● 北, 대일 접촉 활발(2/14, 도쿄신문)

-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북일 협상과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와 북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접촉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4일 보도
- 북한은 2008년 말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과 접촉, 북한의 정치 상황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

● 2009년도 조·일(북한-일본) 체육인新春 간친회(친목회) 개최(2/9,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2009년도 조·일(북·일본) 체육인新春 간친회(친목회)가 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9일 보도, 모임에는 북한 측에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남승우, 배익주 부의장을 비롯한 체육인들이, 일본 측에서 일본올림픽위원회와 종목별 경기단체 대표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

마. 기타외교 관계

● 北김영남, 이란과 협력관계 강화(2/11,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란의 이슬람혁명 30주년을 맞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
- 김영일 총리도 파르비즈 다부디 이란 제1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북-이란 관계의 강화를 강조

3. 대남정세

● 北조평통, 남북 기사교류 불허 비난(2/13, 조평통 서기국 보도; 2/14, 조선중앙방송)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3일 통일부의 남북 언론 단체 간 기사교류사업 불허조치에 대해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단내겠다는 반통일적 망동”이라고 비난
- 14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최근



남조선의 통일부가 안전보장을 운운하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제기한 우리와의 기사교류를 전면 차단했다”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하는 거래의 염원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동족대결행위”라고 주장

- 조평통은 이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고 있는 대화와 협력, 인권타령이야말로 언어도단이고 민심과 내외여론에 대한 파렴치한 기만”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으로 북남관계는 그 전도가 더욱 암담해지고 앞으로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고 주장
- * 통일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언론본부가 6·15 북측 위 언론분과위원회와의 기사교류 사업을 위해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을 했지만 ‘국가안보와 공공질서·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 경남도, 3월 평양서 ‘교류사업’ 논의(2/12, 연합)

- 경남도 방북단이 3월중 평양을 방문, 올해 도와 북측간 교류협력사업 내용을 협의, 도는 안상근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10여명으로 구성되는 방북단이 3월 11일부터 3박4일간 평양을 방문해 올해 양측이 추진할 협력사업을 확정하고 합의서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12일 발표
- 도는 아직 통일부에 정식 방북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부지사급을 단장으로 한 실무방문은 문제가 없다는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임.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올해 협력사업은 평양 외곽에 거창사과 등 과수농장 조성 확대, 평양시내 삼석구역 삼석농장내 채소비닐하우스 설치, 통일딸기 모종 사업 등임.

● 6·15남·북위원회, 3.1절 공동문건 발표 합의(2/11, 연합)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와 북측 위원회는 올해 3.1절 90돌을 맞아 ‘반일’을 기조로 한 공동문건을 발표키로 했다고 남측위원회 이승환 집행위원단장이 11일 발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다른 집행위원 6명과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방북하고 돌아온 이 단장은 “3.1절 공동행사는 갖지 않고 공동문건을 발표키로 했다”며 “문안은 북측에서 보내오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
- 이번 남, 북측 위원회 간 회의에서 남측은 6·15공동선언 9주년 행사를 공동으로 가질 것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시국”을 이유로 개별 개최할 것을 주장, 3월말-4월초 평양에서 열리는 공동위원장 회의 때 재론키로 함.

● 北, 南 민간단체들에 영농물자 지원 희망(2/11, 연합)

- 국내 50여개 대북지원 단체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



협·회장 정정섭)은 11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과 접촉, 올해 보내기가 시작되기 전에 못자리용 비닐을 북한에 지원키로 합의

- 북민협 총무인 권용찬 국제기아대책기구 사무총장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강영식 사무총장은 “북민협이 3년간 계속 지원하다가 지난해 남한의 정권 교체기에 중단됐던 못자리용 비닐을 다시 보내기로 하고 북측과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늦어도 3월말까지는 보내야할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북민협이 민간 차원에서 비닐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을 하더라도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 180억 원을 활용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실질적인 재원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의 방침이 주목됨.

● 부산, 경남NGO, 北에 햇빛발전소 건립(2/10, 연합)

-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오는 6월 평양에 500kW급 햇빛발전소(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주기로 했다고 10일 발표
-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를 위해 3월18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평양 락랑구역에 있는 어린이영양공장에 햇빛발전소를 건립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음.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클린턴, 6자회담전략 명료히 해야”(2/15)

-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으로 16일부터 일본·인도네시아·한국·중국 등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6자회담 전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을 더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14일 제기됐음.
-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조언하고 북한 비핵화의 원칙을 포기했던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로 인해 혼란에 빠진 동맹국들에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클링너 연구원은 전세계적인 경제 혼란 속에 이뤄지는 이번 클린턴 장관의 방문에선 경제위기 대처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클린턴 장관의 방문에 맞춰 북한의 대남 비방 및 군사적 공세 강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으로 인해 북한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그는 북한의 태도를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내세운 대북정책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이제 갓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선제적 공세라고 분석했음. 그는 이 같은 근거로 북한이 지난 1월 중순 6자회담 합의를 거부하면서 미국과 외교 관계가 성립되고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며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제거해야 비핵화를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과 북한이 미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를 준비중인 사실을 상기시켰음.
-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로, 북한의 6자회담 합의 불이행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고 기존 합의를 재협상하기 위한 북한의 협상전략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클린턴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핵무기보유국으로서 북한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동맹국들에 명료하게 확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는 또 미국 관리들의 발언이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북핵 정책이 비핵화에서 단순한 추가 핵무기 생산을 막고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옮겨가는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며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6자회담 전략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클린턴 “北核 완전포기시 정상화 용의”(2/14)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돼 있으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과 관련해서는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클린턴 장관은 경고했음.
- 클린턴 장관은 취임후 첫 해외순방인 다음주 한·중·일 3국과 인도네시아 등 4개국 방문을 앞두고 이날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와 다른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음. 그는 동북아의 안정 최대 위협을 북한 핵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고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해 한국 등 회담 참가국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지지하며 나는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킬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부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종전의 핵무기비확산조약 체결 상태로 복귀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이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음. 하지만,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대남 위협발언에 대해 “어떤 도발 행동과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공세를 하지 않아야 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해 북한의 대남 공세가 북한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전달했음.
- 클린턴 장관은 뉴욕필하모닉의 평양 공연과 같은 미국과 북한 간의 교류에 관한 질문에도 “상당 부분이 북한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이나 말 등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런 행동은 북한과 함께 일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한미 교역과 관련, “미국과 한국은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교역을 확대키로 했다”며 이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클린턴 장관은 지난달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필요성을 밝혔었지만 이날은 FTA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교역이 양국에게 득이 돼야 한다는 점만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북한과 중국의 인권문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했음. 그는 “우리는 인권을 확대하고 존중하는 세계,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하고 티베트와 모든 중국 국민이 처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자신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



듣기 위해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잊고 않고 있으며 다음 주 도쿄(東京)에서 이들 가족 일부와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클린턴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 향후 미국의 평화와 진전,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중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적이라도 같은 배를 타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협력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고사성어 오월동주(吳越同舟)를 예로 들어 한배를 탄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클린턴은 또 에너지나 기후변화 대응, 경제문제 등 중국과 함께 다뤄야 할 현안들이 워낙 광범위한 점을 설명하고 재무부가 주도하는 전략경제대화 외에 폭넓은 중국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클린턴은 아시아를 첫 방문지로 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국의 미래의 상당부분이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새 정부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시아의 협력국들에 쏟으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첫 출장지로 아시아를 택한 것은 쉬운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미국 혼자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세계도 미국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美 또 ‘北 핵무기 보유’ 명기(2/12)

-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무기 실체 인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기구의 보고서가 또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했다.
-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내 정보기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위(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최근 발간한 ‘전세계 보건실태의 전략적 의미’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기술했음.
- 보고서는 12개국의 보건실태 연구 결과에서 12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 인도, 북한 그리고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핵보유국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China, India, North Korea, and Russia possess nuclear weapons, while Iran is an aspiring nuclear power)”고 기술했음.
- 보고서는 특히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비공식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도는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핵무기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나란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명기한 반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과는 차별화해서 언급했음.
-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최근들어 정보 및 국방관련 기관들은 북한



의 핵무기 보유 자체는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왔음.

- NIC는 작년 11월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국가(a nuclear weapon state)’로 언급한 바 있고,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OM)도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핵무기보유국으로 기술, 파문을 일으킨 바 있음. 또 최근 미 CIA 국장에 지명된 리언 파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도 상원 정보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nuclear weapon)를 폭발시켰다”고 말해 종전까지의 ‘핵장치(nuclear device) 폭발’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음.

● ‘北 위성운반체 발사준비’ 주장 눈길(2/12)

- 온라인 군사전문매체인 ‘글로벌시큐리티’의 찰스 빅 선임기술연구원은 지난달 말 ‘북한 탄도 미사일 및 우주 발사체 개발 업데이트’라는 글에서 “북한이 올해 봄이나 여름에 위성운반체 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1~2개의 대포동 2호를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발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포동 2호가 위성을 쏘아 올리는 위성운반체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인 것.
- 빅 연구원의 이런 주장은 우리 정보기관이 과거 추정했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음. 2005년 2월 당시 고영구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대포동 1호(2천km급)는 1998년 8월 인공위성 발사시 운반체로 사용된 바 있고 대포동 2호(6천km급)는 현재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1998년 8월 발사된 대포동 1호는 노동미사일과 스커드C 미사일 로켓을 각각 1단, 2단으로 장착한 것으로 인공위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됐다(위성운반체)는 것. 발사 당시 제임스 루빈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아주 작은 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리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히기도 했음.
- 위성운반체와 장거리 미사일인 대륙간탄도탄(ICBM)은 사실상 미사일(로켓)의 머릿부분에 탑재된 것이 위성이나 핵탄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발사준비 과정과 발사 후 비행과정 등이 상당히 유사함. 현재 북한이 발사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이 실제 위성운반체로 사용될지를 떠나 북측이 발사하고 나서 이를 위성운반체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커 보임.
-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나서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운반체라고 주장할 경우 2006년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유엔에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사일 기술력은 기술력대로 과시할 수 있기 때문. 북한은 1998년 8월 발사한 미사일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밝히고 정



상적으로 지구궤도를 선회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음. 북한은 당시 이 위성의 수명이 2년이라고 언급했음. 여기에다 정상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이라면 지상통제소와 교신하는 흔적이 포착되어야 하지만 이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美 북한특사에 보즈워스 확실시(2/12)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6자회담 등 대북정책을 다룰 특사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미대사를 지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6자회담을 비롯해 북핵문제를 전담할 북한특사로 보즈워스 전 대사가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AP통신과 로이터 통신도 이날 익명의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 클린턴 국무장관이 보즈워스 전 대사를 북한특사에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이들 국무부 관리들은 보즈워스 전 대사가 국무부로부터 북한특사 일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며, 클린턴 장관이 13일 뉴욕에서 대(對) 아시아 정책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두 통신은 전했다.
- 보즈워스 전 대사는 현재 미국 터프츠대학의 법학 및 외교전문대학원인 플래처스쿨 학장으로 일하고 있음. 주한미대사(1997~2000)에 앞서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추진된 대북경수로 사업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이었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초대 사무총장(1995~1997)을 지냈음. 워싱턴 외교가에선 보즈워스 전 대사의 북한특사 지명이 확실시되는 데 대해 KEDO 초대 사무총장을 지내며 북핵문제를 다뤄왔고, 북한 측과도 협상 경험이 많으며 최근까지도 북한을 방문하는 등 계속 접촉을 유지해온 점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美 국방부 “北미사일 발사, 6자회담 방해”(2/12)

- 미국 국방부는 11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준비설과 관련,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핵 6자회담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브라이언 휘트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준비 움직임과 관련,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행동들이 일어난다면 현재 6자회담 틀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교적 노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또 휘트먼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에 안정을 가져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면서 “북한은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을 가중시킬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말아야 한다는 게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이라며 북한에 경고했음.



- 앞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준비를 계속한다면 미국은 이를 요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또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는 우리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으며,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대포동 미사일 요격을 위한 준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게이츠 장관은 대포동 미사일의 사거리에 대해 “북한이 처음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얼마 날아가지 못하고 떨어졌다”면서 “사거리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판단으로는) 매우 짧다”고 밝혀 미 본토 도달능력에는 회의감을 보였었다.

● 美 “모스크바 6자 실무회의 참석”(2/12)

- 미국은 오는 19~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북핵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이 11일 밝혔다.
- 모스크바 6자 실무그룹회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과 같은 기간에 열리게 됨. 우드 대변인은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 북핵 폐기의 기본 원칙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 북한이 한국과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 하기로 선언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우드 대변인은 이것으로 인해 미국이 6자 실무회의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담장에 나가서 사전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측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다. 그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상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이번 실무회의에는 알렉산더 아비즈 국무부 동아태수석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

나. 미·북 관계

● “클린턴, 北에 경고와 구애 메시지”<CNN>(2/15)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및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앞서 북한의 대남 도발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핵프로그램 폐기시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구애를 함께 했다고 CNN방송이 14일 보도했다.
- CNN은 클린턴 장관이 지난 13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45분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한에 대해 침략행위를 하지 않으면 북한과 영구적인 평화를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을 통해 경고와 구애가 담긴 대북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 이같은 북한과 관계정상화라는 화해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장관은 북한측에 ‘남한에 대해 어떠한 도발 행위나 도움이 되지 않는 공격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CNN은 밝혔음. 워싱턴 포스트(WP)는 클린턴 장관이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어느 관리들보다도 훨씬 분명하게 북한에 관계정상화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음.
- 포스트는 클린턴 장관이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되면”이라는 전제 아래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관계정상화와 평화조약, 에너지 및 경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 이는 또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기 전에 이러한 조치들 가운데 일부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포스트는 “2005년 부시 행정부에 의해 최종 합의사항에 이러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었지만 부시 행정부의 어떤 관리도 클린턴 장관의 이번 연설만큼 분명하게 (북미관계 정상화 등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 한편, 워싱턴 타임스는 “클린턴 장관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외교관계를 맺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처음 약속을 되풀이했다”면서 “북한에 북핵 6자회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도발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음.
- 타임스는 또 클린턴 장관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 동결을 위한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94년 제네바 합의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지만 부시 행정부가 2002년 발견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은 94년 제네바 합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다룰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 클린턴, 美 대북정책 ‘큰 틀’ 제시(2/14)

-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중인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13일 오바마 정부 대북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음. 내주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일본·중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오르는 클린턴 장관은 이날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오바마 정부의 북한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의 윤곽을 드러낸 것.
- 이날 클린턴 장관이 밝힌 오바마 정부 대북정책의 큰 틀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지속 추진,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병행 추진 등으로 요약됨.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어젠다에서 북한에 대해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는데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의 핵심내용을 대강이나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음.



- 클린턴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핵프로그램을 ‘동북아 안정에 가장 첨예한 도전’으로 규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음. 그는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력할 것임을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 일본, 중국과 6자회담을 다시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오바마 정부에서도 북핵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거듭 확인한 것.
 - 클린턴 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과정에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유용한 통로’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음. 클린턴 장관은 그러나 최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도발행위나 대남비방공세가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북한에 경고했음.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이(6자회담) 논의를 진전시킬 기회를 가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어떠한 도발행위나 한국에 대한 비난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이어 클린턴 장관은 북한 당국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조기 복귀토록 합의한 사실을 언급한 뒤 “우리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도 제시했음. 그는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정부는 양자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며, 북한의 에너지와 주민들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음. 클린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북미 관계정상화를 병행해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도 해석됨.
 - 이는 임기말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 유사한 것이지만 애초에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해야 북미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2007년 2.13합의 이전의 부시 행정부 입장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대북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 만큼 클린턴 장관이 밝힌 대북정책의 큰 틀은 미국 정부내에서 세부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됨.
- “클린턴, 亞순방서 北위협에 공동전선 구축”(2/13)
- 내주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한·중·일 정부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를 포함한 북한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다루는 데 6자회담 참여국들이 ‘공동전선’을 이루며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할 예정이라고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음.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12일(미국시간) 미국 국제방문자전국협의회(NCIV) 연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만일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면 전망이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6자회담 참여국들과 함께 분명히 밝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역 모든 나라가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도 6자회담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미국은 여전히 북핵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도 이를 기회로 여겨 6자회담 참여국과 협상을 지속하기를 미국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핵무기의 확산, 특히 테러집단에 핵무기가 흘러나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 美의원들, 한인 이산가족상봉 지원키로<RFA>(2/13)

- 미국 의회의 이산가족위원회 공동의장인 마크 커크(공화) 하원의원과 짐 메더슨(민주) 하원의원은 재미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북한에 압박을 가해줄 것을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에게 요청할 예정.
- 커크 의원은 12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사무실에서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대표들을 면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에 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 때보다 재미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커크 의원은 클린턴 장관과 면담을 신청할 것이며 한두달 내에 면담이 성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와 관련, 미국 전역에 있는 전국5도민연합회, 재미시민연맹, 한미공공정책위원회와 같은 단체들이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서한을 써서 커크 의원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커크 의원의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차영대 재미한국계 시민연맹 회장이 밝혔다. 한인 교포 가운데 남북이산가족은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조지 부시 행정부 때 한인이산가족상봉지원법이 입법됐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RFA는 전했다.

● 보즈워스 “북한에 친서 전달한 적 없다”(2/13)

- 지난주 북한을 방문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대사는 12일 방북 기간에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의 친서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보즈워스 전 대사는 이날 일부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나는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한 만큼 친서를 전달하거나 한 일은 절대로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산케이(産經)신문은 6자회담 소식통을 인용, 보즈워스 전 대사가 비핵화 작업의 진전을 요구하는 클린턴 장관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보즈워스 전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특사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 시점에서는 노코멘트”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맞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렇다. 결정은 미국 정부에 달려 있다”고 밝혀 자신은 인선 제의를 수용했고 인선 결과 발표만 남아있음을 시사했음.

● “보즈워스 전 대사, 클린턴 친서 전달”<산케이>(2/13)

- 미국의 민간 방북단으로서 지난 7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대사가 비핵화 작업의 진전을 요구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친서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6자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이 친서에 대해 북한 측은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원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즈워스 전 주한대사는 지난 3일 평양에 도착, 다음날 북한 측에 “6자회담 틀에서 핵시설 검증 작업을 조기에 완료하자”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전달했음.
- 이에 대해 북한 측은 핵 프로그램 신고는 한반도와 주변의 비핵화를 전제로 ▲핵 폐기는 행동계획의 원칙에서 진전시킨다 ▲핵시설에서의 연료봉 제거 등 구체적이 핵 불능화는 에너지 지원 결과를 확인한 뒤 진전시킨다는 항목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우선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음. 보즈워스 전 대사는 7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자세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앞서 미국과 유럽 언론은 보즈워스 전 대사가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특사로 취임한다고 보도한 바 있음.

● “北, 클린턴 아시아순방때 미사일실험 가능성”(2/13)

- 북한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등 아시아 순방에 맞춰 미국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처럼 한국과 미국 정부를 이간하려고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음.
- 발비나 황(여) 조지타운대 부교수는 12일 워싱턴 DC에 있는 브루킹스연구소가 클린턴 장관의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개최한 세미나에서 “최근 움직임으로 볼 때 북한이 클린턴 장관의 아시아 방문에 맞춰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 있다”고 추정했음.
- 한국계 2세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한국·아시아담당 수석 특별보좌관을 지낸 황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통해 노리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음. 그는 이어 “설사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고 미국이 직접 나서서 것보다는 유엔을 통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중국



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음. 그는 또 “북한은 민주당 정부인 클린턴 행정부를 상대해 본 적이 있다”며 “당시 북한은 한국과 미국 정부를 이간시키는 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다시 한·미 정부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황 교수는 클린턴 장관이 이번 한국 방문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클린턴 장관은 FTA 통과에 많은 열의를 갖고 있는 한국 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음. 황교수는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현재 경제위기로 국민정서가 보호무역주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미국민과 의회를 설득해 FTA를 통과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한·미 FTA 통과에 대한 선부른 기대감을 주거나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은 양국 간에 불필요한 마찰만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 美국가정보국장 “김정일 건강 상당 회복”(2/13)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작년 8월 뇌졸중을 앓았지만 지금은 상당정도 건강을 회복, 중요한 사항은 김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테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12일 밝혔음.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블레어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의 국가위협평가 청문회에 출석, 서면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은 작년 8월 뇌졸중을 앓아 수주동안 통치불능상태였지만 최근의 공개활동은 그의 건강이 상당정도 개선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음.
- 블레어 국장은 또 “우리는 김 위원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국가통제기구들은 여전히 강력하고, 북한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분석했음. 이어 블레어 국장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 “열악한 경제상황이 북한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체제는 공개발표를 통해 적절한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작년 가을 북한의 곡물수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미국이 50만t의 식량을 지원키로 해 향후 몇 달 동안은 피폐화된 식량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지만 북한경제는 지난 1990년대 이후 여전히 침체하고 있고, 경제회복 전망은 미미하다고 지적했음.
- 블레어 국장은 특히 “식량문제에다가 더불어 비료와 에너지 부족이 경제를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투자지출은 무시할 정도로 적고, 무역 규모도 미미하며 경제개혁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열악한 경제실적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통치에 대한 반대가 조직화돼 있지 않으며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사건만 가끔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 “北, 체제위협 없으면 핵무기 사용않을 것”(2/13)

- 북한은 김정일 체제가 생존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테니스 블레이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12일 말했다. 블레이어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의 ‘국가위협평가’ 청문회에 출석,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야욕과 확산행동이 동아시아를 불안하도록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블레이어 국장은 “북한 당국은 핵무기를 전쟁(warfighting)보다 전쟁억지, 국제적 지위, 강제적인 외교수단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면서 “어떤 제한된 상황하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또한 북한당국은 군사적인 패배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식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통제력 상실의 위협에 직면하지 않으면 아마도 미군이나 미국 본토를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 핵무기에 대한 블레이어 국장의 이같은 평가는 조지 부시 전임 정권은 물론 한국 정부의 기존 인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됨. 블레이어 국장은 “작년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영변의 핵심적인 핵시설 3개를 폐쇄하고 11개 불능화 조치 중 8개를 완료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 “그러나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다”며 작년 12월 열린 최근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검증 의정서에 서명을 거부한 점을 상기시켰음.
- 핵확산문제와 관련, 그는 “북한은 그동안 이란을 비롯한 중동국가들에게 탄도미사일 및 관련 부품을 팔아왔고, 시리아의 핵원자로 건설을 도왔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그는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보다는 핵기술이나 덜 민감한 장비들을 다른 국가나 비국가단체에 판매할 가능성이 더 많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억지력을 위해 일정정도 핵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음. 또 그는 “이는 북한당국이 핵공격이나 테러공격에 사용한 핵물질을 미국이 추적한 결과 북한에서 다른 국가나 단체에게 판 것으로 드러나면, 체제종식에 이를 수 있는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도 블레이어 국장은 “다만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갖게 되고,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핵무기나 핵물질을 다른 나라나 단체에 넘기려는 욕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美 北에 “도발적 행동말라” 재촉구(2/13)

- 미 국무부는 12일 북한의 장거리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 북한측에 어떤 도발적인 행동도 하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음.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미국)의 정책은 분명하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설과 관련, 우리는 항상 북한에 도발적인 어떤 행동도 말 것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 우드 대변인은 이어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무력부장에 김영춘 총참모장을 임명하는 등 측근들을 승진시킨 데 대해 “논평할 게 없다”며 언급을 피했음.

● 美전문가들 “北과 미사일협상도 해야”(2/13)

-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실험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12일 미-북간 미사일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북정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은 물론 다른 국가에 대한 미사일 기술지원을 중단시키는 일은 반드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의 한 부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 걸쳐 대북특사를 지냈던 프리처드 소장은 “오로지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억지하는데 집중하는 바람에 지난 2000년 11월부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중대한 외교적 손실중 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오바마 정부에서는 6자회담 추진과 병행해 대북 정책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의를 6자회담의 틀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촉구했음.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냈던 차 교수는 구체적으로 현재 6자회담의 5개 워킹그룹 내에 미사일 관련 워킹그룹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북한이 미사일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포기할 리 만무하기 때문에 미사일 협상은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 및 에너지 문제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던 셸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프로그램 국장도 “북한이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방법을 확보했을 경우에 대비, 오바마 정부는 비핵화 협상과 더불어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타결 직전까지 갔었던 미사일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음. 해리슨 국장은 방북 당시 면담한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핵 협상도 하는데, 미사일 협상은 왜 못하겠느냐”고 답변했다고 강조, 북한이 미사일 협상 재개에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임을 시사했음.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내지 발사준비는 긴장을 고조시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기초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만약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한다면 이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이 처한 안보위협과 관련한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음.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이론적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상태에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의 발사가 성공한다면 이는 그동안 북한의 군사위협을 가볍게 봤던 인식에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대포동2호 위성운반체로 실험할 수도”(2/12)

-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를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대포동 2호를 군사용 미사일이 아닌 위성운반체로 발사실험할 수도 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가가 밝혔음. 위성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위성을 탑재했느냐 여부와 비행궤도 등만 다를 뿐 발사준비과정 및 발사 후 비행과정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
-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뒤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발사라고 주장할 경우 북한은 지난 2006년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유엔에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기술력은 기술력대로 과시할 수 있게 됨. 앞서 북한은 지난 1998년에도 사거리 2천500km 상당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뒤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고 주장했었음.
- 특히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7일 이란이 자체 개발한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2호를 통해 ‘오미디’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리자 ‘평화적인 우주이용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논평을 통해 이란의 입장을 두둔한 것은 물론 이란처럼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뒤 ‘위성운반체 실험’으로 강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음.

● “클린턴 조기방북 가능성 희박” <美전문가>(2/12)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북핵문제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을 조기에 방문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등 아시아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음. 이들은 다음 주 취임 후 처음으로 한중일 3국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클린턴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전략적 동맹관계를 동북아 지역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세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역할 증대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했음.



- 또 클린턴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미관계의 최대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핵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1일 워싱턴 D.C.에 있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한국 등 아시아 특파원들을 초청해 클링턴 장관의 아시아 첫 방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클린턴 장관도 북핵문제에 중대한 진전이 없이는 조기에 방북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클린턴의 장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장관 인준청문회 당시 북한 핵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는 6자회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그는 설명했다.
-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클린턴 장관이 한일 방문을 통해 전략적 동맹관계의 발전 방안을 주요 의제로 제기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부대 파견 등을 통한 역할 증대 방안을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음. 또 클린턴 장관은 한국 방문에서는 확고한 안보공약과 더불어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FTA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자동차 부분을 포함한 재협상인지 또는 부속합의서 형식이 될지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음.
- 이어 더렉 시저스 연구원은 이번 클린턴 장관이 이번 중국방문에서 국제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중요한 의제로 삼으려 하겠지만, 현재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공석이기 때문에 중국 측과 경제협력 방안을 놓고 실질적인 협의를 하기는 어렵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접근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음.

● 美 “北, 긴장조성 어떤 조치도 말아야”(2/12)

- 미국 정부는 11일 북한의 잇단 위협행동과 관련, 북한은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음.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의 위협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미국은 북한의 일부 행동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누차 언급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우드 대변인 직무대행은 또 “우리(미국)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음. 이어 그는 오는 19~20일 러시아에서 북핵 6자회담 실무그룹 회담에 미국도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면서 알렉산더 알비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단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위성, 北미사일 발사 움직임 포착” <CNN> (2/11)

- 북한의 함경북도 무수단리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로 보이는 활동이 미군 첩보위성에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11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음. CNN은 한 미국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던 장소에서 원격 측정설비를 조립하는 모습이 며칠 전에 촬영됐다고 전했다.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은 무수단리 기지에서 발사됐음.
- 발사되는 미사일을 감시하는데 쓰이는 원격 측정장치는 미사일 발사 실험에 필수적인 설비이며, 2006년 미사일 발사 직전에도 설비 조립 활동이 이뤄진 바 있음. 이 관리는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장으로 옮겼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장으로 옮긴다면 우려할 만한 사항이 되고 알래스카의 미사일방어(MD) 기지가 비상 태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음.
-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4천km 정도로 예상되며 알래스카도 공격권에 들지만 2006년 실험 때는 약 40초간 비행한 뒤 파괴됐음.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포동’ 미사일의 사거리에 대해 “얼마 날아가지 못하고 떨어졌다”며 “지금까지는 매우 짧다”고 말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보보고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음.

● 새 대북정책 검토기간 美전문가 방북단 러시(2/11)

-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한반도관련 전·현직 관리와 민간전문가들을 적극 접촉하고 있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키려는 의도로 보임. 북한은 이와 함께 외무성 대변인 성명,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미사일 이동 시위 등을 통해서도 오바마 행정부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 이에 대해 앞으로 대북특사나 국무장관 자문관 등의 고위직책으로 대북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할 것이 유력시되는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이 ‘조급해 하지 말고 잠시 참고 기다려라’라고 직접 북한측에 촉구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측의 대북 공개 메시지로 풀이됨.
-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대사를 비롯한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와 민간전문가들이 지난 3일 방북한 데 이어 지난주말부터 수전 셔크 아시아협회 특별연구원이 이끄는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을 방문중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했다. RFA는 소식통을 인용, 셔크 특별연구원은 비정부차원의 협의기구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 창설자로서 현재 이 기구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북한도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특기했음.
- 셔크 특별연구원의 방북단에는 북한의 ‘연착륙’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2005년 구성된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캐린 리 사무총장과



비정부 구호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포함됐음. 또 핵군축 전문가인 존 루이스 스탠퍼드대 교수가 이끄는 방북단과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그램 국장이 주도하는 방북단도 각각 이달 중 방북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전했다. 북한측에선 ‘조미(북미)민간교류협회’ 소속 북한 관리 4명이 5개 미국 비정부 구호단체의 초청으로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할 예정.

- 한편 서면 전 대북 정책 조정관은 10일 워싱턴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이동 움직임과 관련, “오늘 이 행사에 관한 보도물을 볼 북한”을 향해 “참아라.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다. 잊혀질리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말한 대로 당신들과 대좌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6자회담 합의를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진전을 원한다. 인내심을 가져라”라고 공개 메시지를 보냈음.

● 게이츠 “대포동 발사준비시 요격태세”(2/11)

-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0일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준비를 계속한다면 미국은 이를 요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 게이츠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는 우리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으며,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대포동 미사일 요격을 위한 준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게이츠 장관은 대포동 미사일의 사거리에 대해 “북한이 처음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얼마 날아가지 못하고 떨어졌다”면서 “사거리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판단으로는) 매우 짧다”고 밝혀 미 본토 도달능력에는 회의감을 보였음.
- 그는 “정보사항에 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대포동 발사움직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북한이 핵검증과 비핵화 진전과 관련해 협상 파트너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데 주력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해 도발적 행동 대신 협상태이블에 복귀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음.

● 클린턴 “北 위협행동 용납안돼”(2/11)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최근 북한의 위협행동에 대해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클린턴 장관은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이 향후 수주 혹은 수개월내에 6자회담이나 다른 형태의 양자 및 다자협상에 응하기를 기대했음. 취임 후 처음으로 내주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는 클린턴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카렐 슈바르첸베르코 체코 외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



- 견에서 “최근 북한의 행동이 동북아 지역 안정과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의 전조가 아니길 기대한다”고 우려를 나타냈음. 그러면서 클린턴 장관은 “북한은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음.
- 그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우리의 입장은 이전과 똑같다. 우리는 6자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면서 “우리(미국)와 6자회담 참가국들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하고 북한의 핵확산활동을 중단토록 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음.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이나 다른 양자 및 다자협상을 재개한다면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은 또다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수주, 수 개월내에 그런 일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또 “최근 몇 주간 북한의 태도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을 안다”면서 “관련국들과 협의를 통해 사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이번 아시아 순방 주요관심사 중 하나가 북한 문제임을 시사했음.

● 서면 “대북협상 손쉬운 대타결 없을 것”(2/11)

-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전 국무부 인수팀을 이끌었던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은 10일 “대북협상에 있어서 손쉬운 ‘대타결 (grand bargain)’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셔먼 전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그는 “지금 미국이 직면한 대북환경은 (북미 제네바합의가 이뤄졌던) 지난 1994년, 8년전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힘로 (tough road)’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음.
- 그는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았으나 부시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플루토늄을 확보, 협상테이블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따라서 새 정부의 외교팀은 대북정책의 패러다임과 프레임 어떻게 짜야할지 심각히 고민해야 하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더욱 강화된 협의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 그는 검증, 고농축우라늄, 시리아와의 핵협력 등과 같은 북핵 이슈 가운데 오바마 외교팀이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 “(부시 행정부에서) 6자회담을 통해 검증을 마무리짓는 단계까지 도달했었다”면서 “검증문제가 다음 단계로 계속 추진돼야 하며, 프레임을 바꾸려면 6자회담 당사국들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음.
- 셔먼 전 조정관은 “북한은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을 잊지 않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언급했듯이 북한에 ‘개입정책’을 펼 것인



만큼 북한도 자신들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음.

- 특히 서면 전 조정관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인내심을 거듭 촉구하면서 “미사일 실험은 위험하고도 도발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음. 그는 북한을 상대할 때 사용 가능한 당근과 채찍을 모두 확보하고 이를 시의적절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인권유린이나 비밀스러운 거래 등을 그만둔다면 좋은 일이 많이 있겠지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면 제재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 만큼 선택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음.

● 클린턴 “北 행동 위협전조 아니길 희망”(2/11)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0일 북한의 최근 행동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의 전조가 아니길 기대한다며 북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합의사항을 준수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음.
- 한중일 3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4개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클린턴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카렐 슈바르첸베르크 체코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남한과의 모든 군사적 정치적 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최근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철수했다는 보도와 관련,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음. 그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나온 북한의 행동이 이 지역 주변국들의 안정과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전조가 아니길 희망한다”며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동일하며 6자회담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음.
- 하지만, 북한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북한의 행동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6자회담과 양자와 다자협상을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해야 북한 정부와 북한 국민에게 기회가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몇 주나 몇 개월 이내에 북한이 6자회담을 재개할 희망한다”고 말했음. 그는 또 “지난 몇 주 동안의 북한 태도와 관련, 6자회담 참가국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과 가장 효과적인 진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와 함께 클린턴 장관은 이란의 핵보유에 대해 미국의 반대 입장을 거듭 재확인하고 미국과 이란 양국은 더 나은 상호 이해를 위해 여러 가지 대화를 할 기회를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음.
- 그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다면 워싱턴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이란 정부는 여러 문제에 대해 적의를 버리고 진지하고 책임있는 대화를 시작할 의지를 보여줄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



는 안되고 만약 핵무기 보유를 추구한다면 그들에게 매우 불행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앞으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이란 국민을 위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화를 할 기회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미국방부, 구매관련 對北제재 해제(2/11)

- 미국 국방부가 지난 1월21일 물품구매 관련 대북제재를 해제했음.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정부가 작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함에 따라 이뤄진 것.
- 미국 의회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달 2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테러지원국가나 단체가 소유·통제하는 회사와는 구매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방부의 연방구매세칙(DFARS)에서 북한을 삭제했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소유하거나 북한과 관련을 맺고 있는 회사들로부터도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음.
- 또 이 조항이 계속 적용되는 국가는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4개국으로 줄어들었음. 하지만 미국 국방부가 북한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이번 제재해제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음.

● “美, 북한 핵무기보유 인정 분위기”(2/10)

-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음. 미국의 프리랜서 언론인인 도널드 커크 기사는 10일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는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며 이 같이 전했다.
- 커크 기사는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도 지난 5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 능력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공식견해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음.
- 파네타 지명자는 당시 인사청문회에 출석,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이 2006년 핵무기(nuclear weapon)를 폭발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공식 인정했음.
- 미국 정부는 그동안 2006년 북한이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핵무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핵장치 폭발실험’으로 규정,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왔음.
- 커크 기사는 이어 최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준비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6~12개의 핵탄두를 만들었지



만 발사 능력까지 갖췄는지는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남북미 민간대화’ 北불참으로 연기(2/10)

-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및 미국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조지아대(UGA)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학술포럼이 북한측의 불참 통보로 무기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UGA 부설 국제문제연구소(Globis·소장 박한식교수)는 23일부터 사흘간 조지아주 애선스(Athens)시 UGA에서 ‘남북미 민간대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무기 연기했다고 9일 밝혔다.
- 박한식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측이 사정상 포럼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최근 통보해 왔다”면서 “이에 따라 남북미 민간대화 행사를 일단 연기기로 했으며, 나중에 다시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 포럼은 북미·남북간 현안 해결의 실마리 제공을 위해 민간 채널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던 것으로 남북한과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토론을 벌이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었음.
- 포럼에는 미측에서 토머스 허버드 및 제임스 레이니 전 대사,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등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북한에서는 리종혁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외무성 인사들이 초청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 “클린턴, 亞순방서 北접촉 배제 잘한 일”(2/10)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전쟁 위협에 대해 과거처럼 관심을 기울이고 보상을 제공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내놓아야만 하며, 이런 관점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때 핵심 이슈 목록에서 북한을 제외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택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9일 사설을 통해 지적했음.
- 이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좌초된 북한의 핵무장 해제 절차를 되살릴 것인지, 또 되살린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경우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즉 과거의 방식대로 북한의 위협에 주의를 기울이고 보상을 제공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대해 먼저 답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은 그러면서 실패한 북핵 협상의 설계자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중동문제에 경험이 없고 아랍어도 구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가 그를 이라크 대사로 내정했다는 일부 보도는 의아스럽다고 지적, 대북 접근법이 종전 방식을 답습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음.
- 그러나 클린턴 국무장관이 첫 해외순방국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를 선정하고 이번 순방에서 초점을 맞출 이슈 리스트에



북한을 제외한 점은 올바른 방향으로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사실은 외국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관심을 끄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북한은 최근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발사준비 움직임으로 오바마 정부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면서, 이런 행동이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과거 10년간 북한이 비랑 끝 전술을 통해 6자회담 상대국들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꽤 논리적인 접근법이라고 평가했음.
- 이처럼 과거 10년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한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의 도발에 보상을 제공하는 식으로는 더 큰 도발을 유발할 뿐이며 이런 전략이 작동하는 한 북한 체제는 핵폐기를 향해 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사실은 지적했음.

● 샤프 “北 핵무기 통제력상실 대비책 마련”(2/9)

-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9일 북한의 핵무기 통제력 상실 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불안정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음. 샤프 사령관은 이날 외신기자클럽 강연에서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비책과 관련,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관련계획이 있다”면서 “전면전에 대비한 계획도 있고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비한 계획도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여기에는 자연재해, 내전,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 상실 등 전반적인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며 “김태영 합참의장과 우리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샤프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장거리 미사일 뿐 아니라 군사분계선(MDL) 인근 장사정포, 단거리 미사일, 포병 등에 대한 정밀 정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한·미는 레이더체계를 갖추고 있어 북한의 발사지점과 위치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며 “(유사시)아군의 포병과 공군 전력으로 이를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음. 북한내 군부의 입지 강화설에 대해 샤프 사령관은 “그런 징후는 포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동계훈련도 예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샤프 사령관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해 “핵보유국, 핵 능력, 핵무기 등의 용어가 있지만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북한은 2006년 명백히 핵실험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다. 한·미 양국군은 군사적으로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하고 비핵화와 함께 핵관련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음.
- 샤프 사령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입장에 대해 재확인한 바 있고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며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클린턴 국무장관이 내주 방한해 이 점을 재확인할 것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 주한미군 시설의 핵검증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최종 검증과 관련해 토론하고 합의한 후 고려할 수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관련국들은 그(최종 검증) 날이 오게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그 이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샤프 사령관은 이어 주한미군 추가 감축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2년 이후에도 현재 수준인 2만8천500명을 유지할 것임을 확신한다”며 “1년인 한국 근무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北, 핵보유국으로서 북미대화 원해”(2/9)

- 북한은 지난 3~7일 평양을 방문했던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전문가들에게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북·미 양자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방북했던 미국 민간 전문가 6명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이홍구 전 총리를 비롯한 국내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 이 참석자에 따르면 미국 방북단은 북한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수차례 만났으며 김 부상은 방북단에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도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이를 인정해달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NPT 체제하의 합법적인 핵보유국은 아니더라도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으로 분석됨.
- 김 부상은 또 방북단에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직접 양자대화를 하고 싶다”면서 6자회담에 대해서는 ‘원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방북단의 한 일원이 이날 간담회에서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 측에서 이홍구 전 총리와 한승주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 서울대 교수, 정종욱 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방북단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 아브라모위츠 전 차관보는 앞서 외교부 당국자와 만나 ‘핵무기는 6자회담의 대상이 아니며 검증은 비핵화 3단계(핵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듣고 왔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당국자는 이에 언급, “핵무기가 6자회담의 대상이 아니고 검증은 비핵화 2단계(불능화)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 중·북 관계

● 中, 새 한반도대사에 양허우란(2/13)

- 중국 외교부는 12일 신임 한반도 담당대사에 양허우란(楊厚蘭) 전 아프가니스탄 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1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



르면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양 대사가 오는 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북핵 6자회담 산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에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한다”고 말했다.

- 한반도 담당대사는 최근까지 여성 외교관인 천나이칭(陳乃淸)이 맡아 왔으며 ning푸쿠이(寧賦魁), 리빈(李濱) 전 주한 중국대사도 이 자리를 거쳐 갔음.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차석대표를 겸하게 된 양 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로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한국통이기도 함.

● “北·日 고위인사들 잇따라 중국 방문”(2/12)

- 중국이 북한과 일본의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초청, 주변국과 외교 관계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복수의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12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이날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이 이달 하순께 방중, 양제츠 외교부장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중·일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문제를 비롯해 양국간 공동 현안을 논의하면서 난관에 봉착한 북한 핵 문제와 동북아시아 정세, 금융위기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또 북한의 대외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대외문화 연락위원회의 문재철 위원장대리도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이달 말에 중국을 찾아 북·중 수교 60주년과 양국 우호의 해 행사 준비를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설 예정.
- 문재철 위원장대리는 북한축구협회 위원장이자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유력 인사. 북한 대표단의 이번 방중은 후정웨이(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를 단장으로 한 중국 대표단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베이징에서 양국이 협의를 끝낼 경우 올해 북·중 우호의 해 행사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망했음. 그밖에도 중국은 20~22일 방중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맞아 중·미 관계 발전방안과 북핵 문제, 금융위기 공조방안, 무역불균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 북한과 일본, 미국의 고위 인사들의 방중 외교에 앞서 중국 지도부는 연초부터 활발한 해외 순방 외교를 펼치고 있음.
-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은 각각 아프리카와 남미를 순방 중이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달 말 유럽을 순방한 뒤 귀국했음.

● “中, 北조평통 성명 별 의미부여 안해”(2/9)

- 중국은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 합의사항의 무효를 선언한 것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은 “외교부 등 중국 당국은 결론적으로 조평통의 발표 내용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에서 최근 대남 공세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개개의 발표 내용 자체가 갖는 의미가 희석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소식통들은 “북한이 폐기를 주장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관한 조항들은 북한 스스로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반응도 중국측으로부터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소식통들은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최근 방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까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중국은 자국의 체면이 상당히 구겨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정일, 연내 방중 어려울 듯” <소식통> (2/9)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중 초청을 수락했지만 연내 방중은 어려울 것으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이 9일 전망했다. 대북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이 방중 초청을 수락한 것은 말 그대로 외교적 수사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면서 “조정기에 들어간 미국의 대북정책과 건강 상태, 김 위원장을 맞이해야 하는 중국의 국내외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그의 연내 방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들은 구체적으로 “통상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끝난 뒤에 외빈들을 맞았는데 올해 4~5월에는 중국의 국내 문제로 인해 비밀유지와 철도 운행 제한 등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하반기 역시 국내외 정세 등 여러 변수가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북한 입장에서도 편리한 시간에 방문해 달라는 중국의 초청을 수락하기는 했지만 무리해서 김 위원장의 방중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관측.
-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후 주석은 지난달 말 방북한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김 위원장에게 “편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며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초청했으며 김 위원장도 후 주석의 방중 요청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음.



라. 일·북 관계

● “北, 대일 접촉 활발” <도쿄신문> (2/14)

-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북일 협상과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와 복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접촉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4일 보도했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께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과 접촉, 북한의 정치 상황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양측은 지난해 8월 실무급 협상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위해 북한이 일정한 권한이 부여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가능한 지난해 가을까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바 있음. 그러나 북한은 이런 합의를 했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한 이후 “일본의 새 정권의 뜻을 점검하겠다”면서 재조사 착수를 보류했음. 이런 상황에서 북한측이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을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대화 노선을 내걸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미국이 북일간 대화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일본과도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도쿄신문은 분석했음.

마. 기타

● 김정남 14일 베이징 경유 귀국(2/15)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38)이 14일 베이징의 서우두(首都)공항을 통해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귀국했다고 대북 소식통들이 15일 밝혔음.
- 소식통들에 따르면 베이징과 마카오를 방문했던 김정남은 김정일 위원장의 67회 생일(16일)을 이틀 앞둔 이날 귀국했으나 서우두 공항에서 특별 통로를 통해 항공기에 탑승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대기 하던 보도진에게 출국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음.
- 김정남은 지난 1월24일 평양에서 베이징 공항에 도착할 때와 사흘 후인 27일 베이징에서 마카오로 떠날 때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 문제에 대해 “관심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이례적으로 보도진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목을 받았음. 그는 마카오 공항에서도 김 위원장의 건강이 “매우 좋아 보였다”고 언급하는 등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음. 그는 그러나 이번 평양 귀국 때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마카오에 인접한 주하이(珠海)와 광저우(廣州)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고 고려항공에 탑승할 때도 VIP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 스위스서 재생에너지 기술교육” <RFA> (2/14)

- 북한 대표단이 오는 3월 스위스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기술교육을 받게 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



음. 북한에 재생에너지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아가페 인터내셔널 (Agape International) 관계자는 이날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대표단이 3월에 스위스를 방문해 연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 이 관계자는 “3월에 연수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고, 현재 준비 중”이라며 “북한 측도 오겠다는 뜻을 밝혔고 명단을 받아야 비자도 준비하는데 아직 누가 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대표단이 이번 연수 과정에서 풍력 발전기를 직접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아가페 인터내셔널은 북한의 농업 개발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 ‘캠퍼스 푸어 크리스투스’(Campus for Christ)와 함께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돕고 있으며 지난 2007년부터 북한의 황해북도 황주군에 300W와 2kW 규모의 풍력 발전기를 1대씩 설치하고 이에 관한 선진 기술을 전수했음.
- 최근 영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도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조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기술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 총인구 2천405만명” <UNFPA> (2/14)

- 북한의 총인구는 작년 10월 기준 2천405만 1천21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이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 UNFPA가 작년 10월 북한에서 실시한 인구센서스의 예비결과를 입수해 “북한의 인구는 군(軍)시설 거주자 70만 2천 373명을 포함해 모두 2천405만 1천218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 지역별로는 평안남도가 405만 1천706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양시 325만 5천388명, 함경남도 306만 6천141명, 평안북도 272만 8천617명 순이었음. 반면 북부내륙의 산간지방인 자강도와 량강도에는 총인구의 8.39%에 불과한 201만 7천65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북한인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1천172만 2천403명, 여성이 1천232만 8천815명으로 집계돼 여성이 60만 명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조사는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지 않은 군 시설을 제외하고 북한 전역의 588만 7천767 가구에 상주하는 모든 가구원이 조사된 것.
- RFA는 UNFPA 측의 설명을 인용, “예비 결과는 수작업으로 조사 결과를 집계해 컴퓨터로 자료를 처리하는 최종 결과의 수치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며 “북한의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자세한 최종 결과는 올해 4분기에나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작년 10월 1일부터 보름간 UNFPA의 후원 아래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를 실시했음. 북한 전역에서 현장조사 요원 3만 5천200명과 지도요원 7천500명을 동원해 가가호호를 방문, 나이, 성별, 결혼 여부, 가족 수, 가족 구성원의 직업, 개인소득, 가구와 가전제품 목록, 교육



수준, 국가 내 이동, 장애 유무, 출생률, 사망률, 화장실 유무, 난방 등 총 53개 문항에 대한 조사를 벌였음.

● 탈북 할머니와 외손자 11년만에 상봉(2/13)

- 투병중이던 탈북자 할머니가 경찰의 도움으로 역시 탈북한 외손자와 11년만에 상봉했음. 13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손 모(68.여) 씨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입원중이던 대전시 대덕구 법동의 한 병원에서 외손자 이 모(22) 씨를 만나 감격의 눈물을 쏟았음. 1998년 북한에서 탈출해 중국에서 10년동안 거주하다 지난해 4월 중순 홀로 입국한 손씨는 지난달 뇌경색으로 쓰러져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중이었음.
- 투병중에 외손자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전해들은 손 씨는 자신의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인 둔산서 보안과 이방렬 경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 경사는 수소문 끝에 그의 외손자가 지난 1월 입국해 경기 시흥 하나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외손자 이 씨는 지난달 탈북한 뒤 국내에 입국, 하나원에서 국내 적응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피붙이 하나 없던 남한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北 인민무력부장에 김영춘(2/11)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은 11일 김영춘(73)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남한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으로 임명했음.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위원회와 중앙군사위 공동 명의의 ‘결정’에서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음. 그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전까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것은 확인됐고 김 주석 사망 이후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했을 것으로 추측됐었으나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 북한은 이번 발표에서 또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인민무력부가 국방위원회의 산하임을 분명히 했음. 김영춘 신임 인민무력부장은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나왔으며 작전국장 겸 군수동원총국장, 6군단장을 거쳐 1995년 북한군 최고의 차수 계급장을 달았고 총참모장(1998.10-2007.4)을 거쳐 2007년 4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음. 그는 작년 북한정권 수립 6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열병 보고를 하기도 하는 등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힘.
- 김정일 위원장은 이날 또 남한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북한군 총참모장에 리영호 평양방어사령관을 임명했음. 리 총참모장은 남한의 수도방어사령관 격인 평양방어사령관이었던 것 이외에 구체적인 경력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7년 북한군 창설 75주년 열



병식에서 열병지휘관을 맡기도 해 베일에 가려졌었지만 비중있는 인물로 판단됨. 한 고위층 탈북자는 “리영호 신임 총참모장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으로 나이는 60대인 것으로 안다”며 “군 작전국에서 오래 근무했었고 1년여 전부터는 현철해 김명국 리명수 대장 등과 함께 김정일 위원장을 수행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일철 전 인민무력부장과 김격식 전 총참모장의 새 보직은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음. 특히 김격식 전 총참모장은 2007년 4월 총참모장에 임명된 뒤 채 2년도 안 돼 교체됐음.

- 북한이 인민무력부장과 군 총참모장의 인사를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의 결정’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 김영춘이 국방위 부위원장에 임명됐을 때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공개됐고, 김격식이 총참모장에 임명된 것은 군부 행사에 참가한 인물들에 대한 북한 언론매체들의 호칭을 통해 파악됐었음.

● 방북 英의원 “美, 평양에 대사관 열어야”(2/11)

- 북한의 초청으로 최근 방북했던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이 11일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음.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제정한 ‘제3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 서울을 방문 중인 엘튼 의원은 이날 한국 국회에 제안서를 내 “미국 새 행정부는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폭넓은 접근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음.
- 엘튼 의원은 제안서에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립하는 일은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라야 한다. 냉전 시절 미국 대사관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으며, 후진국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1953년 7월 북한과 맺은 정전협정을 아직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심각한 안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엘튼 의원은 또 현재 진행 중인 ‘북핵 6자 회담’이 지나치게 핵 문제에만 집중돼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의 해법으로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대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음.
- 북한이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얻으려 하거나, 무역을 하려고 한다면 이는 안보문제일 뿐 아니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양심수들의 석방과도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대북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 ‘헬싱키 프로세스’는 미국과 구소련, 유럽 국가를 포함한 35개국이 1975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체결한 상호 주권존중·전쟁 방지·인권 보호를 위한 협약으로,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날 제안서를 발표한 엘튼 의원은 평소 북한 주민의 인권 확보와 낙태 반대 운동에 헌신해 온 인물로, 주영 북한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동료 의원 3명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고



나서 베이징을 거쳐 서울을 방문했음.

● 北김영남 “이란과 협력관계 강화”(2/11)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란의 이슬람혁명 30주년을 맞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를 강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축전에서 “이란 이슬람교 혁명승리 30돌에 즈음해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며 “날로 좋게 발전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확대·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 북한 김영일 총리도 파르비즈 다부디 이란 제1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북-이란 관계의 강화를 강조했다. 1973년 4월 수교한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기술 협력 등 군사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기지에 대포동 2호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갖다놓음으로써 시험발사 준비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데 이란은 3일 자체 개발했다는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2호에 ‘오미드’ 인공위성을 실어 발사에 성공했음.

● 美입양 한국계, 암투병속 北어린이 돕기(2/11)

- 반세기전 미국인에게 입양됐던 한국계 미국인이 암 투병 속에서 전재산을 털어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를 돕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11일 소개했음.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상만(64)씨는 자신의 한국 성과 미국인 양아버지인 고 아더 슈나이더씨의 성을 딴 ‘한-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을 설립,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도우면서 특히 북한 어린이 돕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 한씨는 지원물자 분배의 모니터링 문제로 북한 당국과 협의가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지난 1월 처음으로 북한의 사리원과 평성 등 고아원 어린이 800~950명에게 나눠줄 포장음식 14만여개와 겨울 점퍼 1천벌을 보냈음.
- 그가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녘 어린이들의 실상을 처음 접한 것은 지난 1995년. 당시 사업차 북한에 갔다가 기근 상황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고 북한 어린이들을 도와야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먹고 사는 데 바빠”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음. 몇해 전 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가진 게 별로 있지도 않지만 있는 것을 다 저를 위해서 써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재산을 다 정리해 재단에 넣었음.
- 북한에 보낸 포장음식엔 쌀과 콩 등 식물성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혼합된 영양제 등이 담겨 있으며, 특히 미네소타 주에 있는 ‘굶주리는 어린이 돕기’라는 단체 관계자들이 14만개 전부를 일일이 손



으로 정성스레 포장했음. VOA는 한씨의 재단이 양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의 인생 역정을 소개했음. 한씨와 양아버지의 만남은 양아버지가 1954년 서울대 재건 사업 총책임자로 한국에 오는 바람에 이뤄질 수 있었음.

- 6.25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한씨는 일자리를 얻으려 무작정 서울대 병원장실을 찾았으나 문전박대를 당하고 발길을 돌리다 마침 병원장을 만나러 와 있던 슈나이더씨를 만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었음. 한씨와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말까지 배울 정도로 한씨에게 정을 쏟았던 슈나이더씨는 1961년 미국으로 돌아갈 때 당시 16살이던 한씨를 데리고 갔다. 미혼이었던 슈나이더씨가 한씨를 입양하는 데는 미네소타주 출신 연방의원들이 힘을 모았음. 한 슈나이더 재단은 5월초엔 의료진 20여 명을 열흘 정도 일정으로 북한에 보낼 계획. 한씨는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많이 쇠약해진 상태이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의료진과 함께 북한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 “올해 첫 외국인 관광단 14일 방북” <RFA> (2/11)

-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에서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고려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 관광단이 올해 처음으로 14일 북한을 방문하는 등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했다.
-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단은 영국과 호주,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인 등 15명으로 구성됐음.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카커럴 지국장은 “올해 첫 북한 관광을 신청한 외국인의 수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최근 한반도 긴장 상황이 외국인의 북한 여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관광 장소나 일정에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려여행사는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이 예년처럼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이 기간을 겨냥해 미국인을 대상으로 북한관광 홍보를 시작했다고 RFA는 전했다.

● “최근 일본정착 탈북자 200여명” (2/11)

- 최근에 북한을 탈출, 일본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200여명에 달하며 가까운 장래에 북한 경제가 붕괴하고 식량부족사태가 심화될 경우 일본에 재정착하려는 탈북자들의 탈출행렬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10일 제기됐음.
- 호주국립대학의 테사 모리스-스즈키 교수(아·태역사)는 최근 미국 하와이의 동서센터가 발행하는 소식지 기고문에서 지난 1959~1984년까지 일본에서 복송된 일본인이나 조총련 및 그 가족들이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탈북, 중국을 거쳐 일본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 일본에 재정착한 탈북자만 200여명이며, 앞으로 북한 경제가 붕괴하고 식량난이 악화되면 북한을 탈출, 일본으



로 향하는 위협스런 여정에 나설 사람들의 숫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이 문제와 관련, 명확한 정책이 없다고 비판했음.

- 모리스-스즈키 교수는 일본에 정착하려는 탈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로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에 있던 한국인 9만3천340명(일본인 6천731명)이 복송된 점을 지적했음. 이어 그는 과거에 일본에 살던 조총련 인사들이 각종 차별과 정치적 박해를 받아 대거 북한행을 선택했으며 지금도 조총련 인사들은 일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본내 조총련문제와, 북한에 있는 일본인 복송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채널을 북한과 일본이 구축하면 교착상태에 빠진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최태복 “내 손녀도 英원어민에게서 배운다”(2/10)

- 남한의 국회의장격인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영국 의회 대표단에 북한 영어 교사 양성을 위한 영국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방북단 일원인 캐럴라인 콕스 상원의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음. 최태복 의장은 자신의 손녀도 북한 대학에서 영국문화원 소속 원어민 강사들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근 초등학교부터 영어교육을 하도록 정책을 바꾼 만큼 이들 학생을 가르칠 영어 교사들을 준비시키는 데 원어민 강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북한은 지난해 소학교 3학년부터 영어과목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영어전용 수업을 실시하는 등 영어 말하기와 듣기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영국 의회 방북단을 만난 북한의 궁석웅 외무성 부상은 북한의 고질적인 에너지 부족을 고려해 앞으로 영국의 대북 지원 활동을 단기기간의 ‘긴급구호’에서 장기기간의 ‘개발지원(longer term development assistance)’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RFA는 소개했음.
- 콕스 의원은 북한의 지원 요청에 “유엔의 비탄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하루속히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역제의했으나 북한측은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면서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영국의 의회 방북단은 그러나 북한과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귀국한 직후 영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영국 대학생들이 북한의 대학과 초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금을 조성하고 양국간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음.

● “北 휴대전화끼리 통화 안돼” <소식지>(2/9)

- 북한에서 지난해 12월 중순 이집트 오라스코사의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지난 1일 현재 아직 평양에 국한돼 있으며, 도청이 어려운 휴대전화간 통신은 안된다고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이 만드는 온라인 북한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이 9일 전했다.

- 소식지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평양 시내에서 휴대전화와 일반 전화 사이의 통신은 가능하지만, 휴대전화끼리의 통신은 불가능하다”며 “휴대전화 통화가 불완전한 이유는 도청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소식지는 또 “지방의 유선 전화로 평양의 휴대전화에 거는 것은 가능하지만, 평양의 휴대전화로 지방의 유선전화에 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휴대전화관련 도청 시스템이 부분적으로만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통신 요금은 1분당 1달러 정도이며, 단말기 가격은 최근 360유로에서 180유로(한화 32만원 정도)로 내렸지만 휴대전화 서비스가 불편하고 비싸 “무역 일꾼들과 개인 장사꾼들을 포함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오라스콤 휴대전화에 무관심하다”고 소식지는 전했다.

● “北, 평양 사우디戰서 월드컵본선 가늠” <조선신보> (2/9)

-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4차전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간 경기가 11일 평양에서 열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9일 이같이 전하면서 이 경기가 북한의 월드컵 본선 진출 여부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신문은 이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팀과 (북한간) 첫 대전이자 이 경기로 (북한이) 같은 조(B조)에 속하는 팀과 모두 한번씩 맞서게 되는 셈”이라며 “최종 예선 첫 단계를 마무리하며 본선 진출 가망성을 가늠하는 데서 중요한 경기”라고 소개했음.
- 조선신보는 북한팀의 대 사우디전은 “평양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최종 예선경기”라며 “조국 인민들의 열광적인 응원에 떠받들려 조선팀 선수들은 뛰고 뛰고 또 뛰며 힘껏 볼을 찰 것”이라고 말했음. 이 신문은 또 북한 대표팀에서 뛰는 안영학, 정대세가 6일 일본을 떠나 북한팀에 합류했다면서 “재일동포들의 염원을 안고 모든 힘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4월 이후 빠른 시일내 李대통령 訪美추진” (2/13)

- 오는 4월 런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데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미국을 방



문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12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백악관 고위 인사와 만나서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별도로 정상회담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뜻과 함께 이 대통령의 방미 및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회동할 것은 확실하지만 별도로 양자 회담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 이 당국자는 또 “(한국 측은) 4월 런던회의 이후 빠른 시일내 이 대통령이 먼저 미국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미 행정부 내 주요 인사들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아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오바마 정부는 내달까지 가야 차관·차관보 인선을 마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인선 작업이 빨리 마무리돼야 대북정책 리뷰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와 관련, 이 당국자는 “백악관 고위인사가 ‘북한과 접촉할 경우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통미봉남전략(미국과 통하고 한국은 배제한다는 북한의 전략)은 이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오바마 정부 내 한반도 업무 관련 인사들이 한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 한·미 양국 간 이해 및 공조가 잘 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 미국의 북한 핵무기 보유국 인정 여부와 관련, 이 당국자는 “백악관 고위인사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선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정부의 키워드는 ‘인내’이며, 인내심을 갖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한국의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특사 파견은 특사를 파견했을 때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밝혀 현 상황에서 당장 대북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은 적음을 시사했다.

● 한덕수 주미대사 이달말 부임할듯(2/10)

- 한덕수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이 도착해 이르면 이달 말에는 현지에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0일 “한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이 최근 부여됐다”면서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에는 부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외교부는 아그레망이 도착함에 따라 한·미 외교장관회담차 오는 19~20일 방한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한 대사 내정자를 소개하는 자리도 만들 계획.
- 이 당국자는 “한 대사 내정자가 대사로서 공식적으로 임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신임장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 공식행사에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한미FTA 비준위해 美로비스트 고용(2/9)

-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측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작년 말 미국의 유명 로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8일 뒤늦게 확인됐음. 이에 따라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버락 오바마 정부 및 미 의회를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FTA 로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작년 12월 29일 미국의 유명 로비업체인 ‘파븐 팜퍼 스트래티지스’(PPS, Parven Pomper Strategies)와 계약을 맺고 한미 FTA에 관한 전략적 자문과 오바마 정부·미 의회에 대한 로비를 의뢰했음. PPS사는 스콧 파브과 브라이언 팜퍼가 설립한 로비회사로, 무역분야에 정통하며 특히 민주당측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양측은 계약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계약료는 6개월간 12만달러로 합의했으며,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음.
- 정부가 한미 FTA와 관련해 로비스트를 고용한 것은 한미 FTA에 대해 소극적인 오바마 행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적극 설명함으로써 조속한 비준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한미 FTA는 2007년 6월 30일 양국간 공식 체결돼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으나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한미 FTA 조기 비준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아졌음.
- 특히 오바마 정부와 미 의회에서는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해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해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나. 한·중 관계

● “한반도 통일 중국에 유리” <중학자들> (2/15)

- 중국이 내심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바라고 있다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중국의 국익에는 평화적이고 통일된 한반도가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 중국 학자들에 의해 제기됐음.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과 진창이(金强一) 옌볜(延邊)대 동북아연구소 소장은 15일 중국 런민(人民)대학이 최근 출간한 잡지 ‘중국외교’에 실린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음.



- 이들은 “중국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한반도의 정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가치가 소멸되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학자들은 대부분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내심 바라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통적인 지정학을 바탕으로 한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반도 분열이 중국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6자회담과 같은 국제회의에서 몇 마디 발언권이나 가질 정도”라면서 “중국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 등은 한반도의 분쟁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진 부주임과 진 소장은 “물론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북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한반도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한반도가 대립된 상황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넓혀 제한적인 발언권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는 한반도가 통일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진 부주임과 진 소장은 “중국은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의 경제차이가 확대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야기되는 등 이미 구조적 모순에 처해 있다”면서 “중국이 경제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새로운 발전형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반봉건 상태에 있는 동북3성 지역을 충분히 개방하고 동북아 지역에 고차원적인 협력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한반도 통일이 되면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가 탄력을 받고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참여하면서 동북아지역에 대규모 경제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진 부주임과 진 소장은 특히 “미국의 동북아지역 통제 전략의 핵심 목표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분열과 대립 때문에 동북아지역 통제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음. 이들은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에 대립하지 않고 미국을 이기는 길은 대립과 충돌을 야기하는 지정학적인 의의를 없애고 협력을 낳는 지정학적인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동북아지역 전략이 안보이익에서 경제이익으로 전환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 지 부주임과 진 소장은 “한반도 문제를 지정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냉전시기에는 가능했지만 현재와 같이 협력하고 교류하는 시기에는 지정학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한·일 관계

● 한일, 북핵·경제위기 공조 확인(2/11)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



상은 11일 회담을 열고 국제무대에서 양국 공조방안과 북핵 및 동북아 안보를 위한 협력, 한·일 학생교류 등 양자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음. 두 장관은 특히 세계 금융·경제위기 속에서 한·일간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 안정화포럼(FSF)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나카소네 외상은 회담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요청했으며 유 장관은 올해 하반기 안에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음.

- ◇국제공조 강화 =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세계 금융·경제위기와 아프가니스탄 지원, 소말리아 해적 등 다양한 국제현안에서 양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 유명환 외교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보호무역 방지 및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4월 런던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의를 계기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일본은 한국의 금융안정화포럼(FSF) 가입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나카소네 외상도 회견에서 “한국은 국제경제 및 국제금융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행위자”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은 한국의 금융안정화포럼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고 확인했음. 일본은 또 회담에서 한국이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2011년 ‘원조효과 고위급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두 장관은 또 지난달 12일 양국 정상이 합의한 아프간 재건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직업훈련과 콩 품종개량, 공동연수사업 등 3개 사업을 우선 추진기로 합의했으며 사업 규모와 시기 등은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음.
- 이 밖에도 양국 모두 해군 함정 파견을 추진 중인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 현지 상호 정보교환을 비롯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 우리 정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함정을 출항시킬 계획이며 일본도 자위대 해군 함정을 3월에 파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핵·동북아 안보 협력 = 한국과 일본은 이번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음.
- 특히 두 장관은 최근 잇따른 강경발언 등으로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 유 장관은 회견에서 “최근 북한에 의한 일련의 강경한 발표 등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데 대해 우려하며 북한이 역내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두 장관은 또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일뿐만 아니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음.
 - 나카소네 외상은 이에 언급,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 일·한·미 3국간 연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다음주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면 오늘 우리의 (심도 있는) 회담을 토대로 한·미·일 3국의 공조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음.
 - 아울러 나카소네 외상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유 장관은 이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유 장관은 소개했음. 나카소네 외상은 또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노력에 일본측의 지지를 표했음.
 - ◇양자 교류·협력 강화 = 올해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외교 수장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음.
 - 유 장관은 “부품·소재산업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를 활성화하고 2012년 여수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의 수석대표를 심위관급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두 장관은 또 양국간 문화·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제2기 이공계 유학생 파견사업을 앞으로 10년간 1천명 규모로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해 나가는 한편, 한·일 문화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의 장인 제3기 한·일 문화교류회의를 발족시키기로 했음.
 - 아울러 2005년 이래 서울 시청 앞 광장과 청계천 등지에서 열려 왔던 한·일 축제한마당 행사를 올해는 9월께 처음으로 서울과 도쿄(東京)에서 연계해 개최하기로 합의했음.
 - 나카소네 외상은 특히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일·한 관계의 미래 비전을 연구할 한·일 신시대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출범을 환영한다”며 “이 프로젝트의 출범 총회를 3월 일본 도쿄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음.
 - 유 장관은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올해 발표될 예정인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관련 기술을 포함하지 말 것을 일본측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일 외교장관회담 오늘 개최(2/11)
-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기 위해 10일 저녁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이 11일 오전 10시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음. 이번 회담은 지난달 12일 한·일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점검 차원에서 열리는 것으로, 두 장관은 회담에서 양국 청소년교류를 비



- 롯한 양자현안과 금융위기 등에서의 국제 공조방안,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안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두 장관은 또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과 소말리아 해적퇴치 등에서 양국 공조방안도 협의. 회담에서는 이와 함께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범인인 김현희 씨와 북한에 납치돼 김 씨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다구치 야에코 씨의 가족 간 만남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임. 양국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사항을 설명.
 - 나카소네 외상은 회담에 앞서 숙소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협력위원회 간부들과 조찬을 함께 한 뒤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한·일 의원연맹 간부단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나카소네 외상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며 경희대를 찾아 '이공계 일본 유학생 파견사업'으로 일본에서 공부했던 학생들과 만난 뒤 이날 저녁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
 -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첫 외국 정상 손님이었던 아소 다로 일본 총리에 이어 외국 외교 수장으로서는 나카소네 외상이 첫 손님"이라며 "이번 회담이 한국과 일본이 국제사회에 함께 공헌하는 협력 관계 구축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韓日 외무, 韓유학생 日유치 합의할듯”(2/11)

- 10일 한국 방문길에 오른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이 11일 오전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 장관과 회담을 갖고 지난 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인적교류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 대학의 이공계 학부에 한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0일 보도.
-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학생 수용 규모를 10년간 1천명 가량으로 계획하고 있음. 양국간 비용 분담과 사업 시작 시기 등은 추후 실무급에서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양국 외무장관은 또 양국 전문가 및 문화계 인사들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다룰 새로운 협의체를 설립하고 국제정치와 경제를 주제로 한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1차 전체회의를 이달 하순께 개최하는데도 합의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 문제와 관련, 양국 외무장관은 오는 16일부터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이 시작되는 것을 참작, 한·미·일 3국이 공조해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음. 나카소네 외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측의 협력을 거듭 요청하고 아프가니스탄 농업 개발 등을 위해 현지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소네 외상은 유명환 외교통상장관과 회담한 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



라. 미·중 관계

● 미·중 27일 베이징서 국방회담(2/15)

-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의 외교·군사관계 정립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오는 20~22일 베이징을 방문, 새 정부 출범 후 첫 외교장관 회의를 갖는데 이어 27~28일 양일간 군사대표단을 파견해 중국과 국방회담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중국 언론매체들이 15일 교도통신을 인용, 보도.
- 중국과 미국은 작년 10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국방회담을 중단했으나 양국 외교관계의 새로운 진전에 맞춰 국방회담을 재개키로 했음.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군사협력과 세계안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해 협력키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 이번 국방회담 의제에는 양국간 반테러 합동군사훈련 실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작년 2월 미국에 반테러 합동군사훈련 실시를 제의했음.
- 한편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4일 베이징을 방문, 중국 외교부 당국자와 만나 클린턴 장관의 방중 일정 및 의제를 논의했다고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이 말했다. 힐 차관보는 클린턴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 수행을 마지막으로 2005년 3월부터 맡아온 동아태차관보직에서 물러나 이라크 주재 미국대사를 맡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음.

● 中, 클린턴 美국무 방중 발표(2/10)

- 중국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22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제츠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클린턴 장관이 사흘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히고 “중·미 양국은 양국 관계와 공동의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말했다.
- 장 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의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자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인사의 방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중·미 관계 발전과 국제 금융위기 대처방안, 중요한 국제 문제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어 “대화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확대해 중미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클린턴 장관은 방중 기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예방하고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양제츠 부장과도 회담하는 한편 강연 등 별도 행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클린턴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15일부터 22일까지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다면서 방중 계획을 공개했음.

마. 미·일 관계

● 클린턴, 17일 日민주당 대표 면담(2/15)

- 취임 후 첫 해외순방국으로 일본을 찾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오는 17일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대표와 면담을 갖음. 외국 외무장관이 일본의 야당 대표를 면담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미 국무장관의 직접 면담은 극히 이례적인 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주 미국대사관을 통해 클린턴 장관이 방문 이틀째인 17일 민주당 대표와 면담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은 오자와 대표의 사전 일정 등을 이유로 일단 거절했으나 정권 담당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을 우려, 미국에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고 이어 17일 저녁 회담을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음.
-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의 정권 유지가 위태로워지고 있는데다 오는 9월의 임기만료 이전에 치러질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권교체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사전 포석으로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소 내각과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10%대로 급락하고 있는 반면 대안으로서의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음.
- 면담에서 클린턴 장관은 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버락 오바마 정권의 기본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주일 미군 재편, 오키나와(沖繩)의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임.
- 오자와 대표는 자민당 간사장 시절(1989~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는 등 ‘친미파’로 분류됐었으나 2006년 4월 민주당 대표 취임 후에는 인도양 급유지원 활동에 반대하는 등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음.
- 오자와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추종해서는 안되며, 대등한 파트너십을 확립해 더욱 강고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클린턴 장관과 오자와 대표간의 면담이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정권교체가 시야에 들어오고 있어 오바마 정권과의 관계 구축이 빠를수록 좋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오자와 대표가 정권을 획득할 때까지는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발언을 삼가는 것이 좋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클린턴 日납치가족 면담 검토할 것”(2/10)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일 기간에 클린턴 장관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을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미 국무부는 9일 일본의 제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 추진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면서도 “우리는 그 제안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클린턴 국무장관이 분명히 일본정부의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드 부대변인은 또 “미국 정부는 납치 문제에 대해 매우 우려해왔다”며 “과거 북한에 대해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납치문제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 미·러 관계

● 미·러 3월 제네바 외무장관회담(2/13)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3월초 제네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미·러 외무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EU) 외교정책 대표가 13일 밝혔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솔라나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클린턴 장관이 3월 6일 제네바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3월 5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국무부는 경호상의 이유로 국무장관의 해외 방문 일정을 확인하지 않았다.

● 미·러, 아프간 보급로 협의(2/11)

-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을 위한 보급로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구체적 협의에 들어갔다고 11일 모스크바 타임스가 보도했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패트릭 문 미 국무부 차관보가 모스크바를 방문해 10일부터 러시아 영토를 이용한 아프간 비군사물자 지원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아프간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 원조와 마약 밀매, 테러 척결 등의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앞서 지난 6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보급품 수송을 위한 영토 통과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미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수송 명세를 통보받으면 영토통과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또 같은 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야프 데 후프 스페페르 사무총장과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부총리는 회담을 통해 나토 주도



의 아프간 작전에 필요한 비군사적인 물품에 대한 육로 수송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 아프간 주둔 미군과 나토군은 현재 대부분의 군수품을 저항세력 활동이 활발한 파키스탄 북부 지역을 거쳐 수송하고 있으나 최근 이 지역의 군 보급물품 창고 및 차량을 겨냥한 탈레반 반군 세력의 테러 공격이 잇따르면서 새로운 수송로를 모색해왔음.
- 특히 키르기스스탄이 2001년부터 아프간 주둔 미군의 중요 보급로 역할을 해온 자국 내 마나스 미 공군 기지 폐쇄를 결정하면서 아프간에 3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할 계획을 세운 미군으로서도 중앙아시아 내 새 보급로 확보가 절실한 상태. 현재 아프간에는 미군을 포함해 6만 2천 명의 다국적군이 주둔 중임.

사. 중·일 관계

● 中, 日에 ‘다오위다오’ 순시 항의(2/12)

- 중국 외교부는 11일 일본이 중·일간 영유권 분쟁 해역인 동중국해 상의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에 순시선을 파견한 데 대해 일본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음.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소식에서 아주국 관계자가 주중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헬리콥터를 탑재한 일본 순시선이 다오위다오에 상시 배치돼 ‘경비체제’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맞는다면 이는 중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음.
- 외교부 관계자는 이어 다오위다오는 예전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일본이 다오위다오에 대한 조치를 확대한다면 중국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음.
- 앞서 중국 언론매체들은 경만보(重慶晚報)는 지난 5일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를 인용해 일본 해상보안청이 지난 1일부터 헬리콥터를 탑재한 대형순시선(PLH)을 다오위다오에 배치했다고 보도했음.
-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센카쿠 제도 경비와 관련해 지금까지 상황에 따라 대형순시선을 파견했는데 이번에 해당 해역에 순시선을 상시 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 중·러 관계

● 中·러 총리 전화외교..“위기 공동대응”(2/13)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이 금융위기에 공동 대응해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자고 다짐했음. 관영 신화통신은 12일 원 총리가 푸틴 총리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가진 전화통화에서 양국간의 공통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음.
- 원 총리는 푸틴 총리에게 “사상 유례없는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와



- 정치 및 중국과 러시아의 발전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양국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국간 정치적 신뢰는 매우 돈독하고 경제·에너지 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잠재력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체제 개혁 등 중요한 문제에서도 광범위한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원 총리는 건국 60주년이란 좋은 계기를 맞아 중국은 ▲러시아와 고위층의 상호방문 활성화 ▲중요한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 ▲문화 교류 활성화 ▲국제문제에서의 협조와 공조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푸틴 총리도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고위급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1949년 정부 수립 직후 러시아의 전신인 소비에트연방과 수교한 중국은 올해를 ‘러시아어의 해’로 정하고 러시아는 내년을 ‘중국어의 해’로 정하는 등 각종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음. 양국 총리는 최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국의 지나친 이윤 추구로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며 미국 비판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최근 세계금융 시스템 개혁을 둘러싸고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자. 기타

● 외교부 “피랍선원 석방” 공식 확인(2/13)

- 소말리아 해상에서 작년 11월 해적에게 납치됐던 일본 선박회사 소유 화물선 ‘캠스타 비너스’호의 한국인 선원 5명이 13일 피랍 90일 만에 풀려났음.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오후 9시30분께(한국시간) 한국인 피랍선원들이 석방됐다”면서 “현재 안전한 공해상으로 이동 중이며 모두 건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캠스타 비너스’호는 인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한 항구로 이동할 예정이며 한국인 선원들은 두바이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인 5명과 필리핀인 18명 등 총 23명이 승선한 일본 선박회사 소유의 파나마국적 2만t급 화물선 ‘캠스타 비너스’호는 작년 11월 15일 소말리아 아덴항 동쪽 96마일 해상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됐었음.
-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직후 재외동포영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주 케냐대사관 및 주 일본대사관에 사고대책반을 각각 설치했음. 또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선주와 해적 간의 협상 상황을 주시해 왔음.



-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해상 납치사건이 빈번한 소말리아 인근해역에 국회 동의를 거쳐 내달께 한국형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을 파견할 계획.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